

교과서연구

제 57 호

2009. 8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전찬구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금융한, 김정호,
윤광원, 홍후조, 권영민
- 편집협력위원(시·도 교육청)
김광화(서울), 전미순(부산),
권충현(대구), 최은아(인천),
권도연(광주), 최재천(대전),
이종문(울산), 김국회(경기),
고경식(강원), 정진구(충북),
이희원(충남), 홍진석(전북),
박광춘(전남), 이진관(경북),
김영범(경남), 양영선(제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홈페이지: www.ktrf.re.kr
- 전화: (02) 2651-1950
- 팩스: (02) 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

- * 표지 글씨 : 신두영
- * 편집 디자인 : (주)미래엔컬처그룹
국정교과서팀

● 권 두 언

- 2 _____ 사교육 대책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 광병선

● 특별 기획:인정 도서 확대 정책, 그 내용과 전망

- 4 _____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망 / 김만곤
10 _____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 / 이화성
19 _____ 교과서 인정 제도의 발전 과제 / 김정호
26 _____ 우리나라의 인정 도서 개발 현황 / 김병규
36 _____ 인정 도서 업무의 절차와 요령 / 윤광원

● 현장 교육

- 46 _____ 주요국의 진로 교육 및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연구 / 강임숙

● 논 단

- 51 _____ 국가 교육과정 개혁의 쟁점과 과제 / 천세영
55 _____ 2009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과 교과서의 변화 전망 / 홍후조
59 _____ 교과서 대여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 김상재
63 _____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시사점 및 학교 현장의 변화 사례 / 이영섭

● 연 재

- 68 _____ 일본인 유학생이 경험한 핀란드의 교육 / 지쓰카와 마유

● 제 언

- 72 _____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란 / 강진아

● 교과서 편집자의 변

- 76 _____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 온다더니 / 윤옥희
80 _____ 교과서는 정성과 끈기 그리고 자존심 / 이상민

● 탐 방

- 84 _____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28)-조영철 /(주)세류교육 CEO

● 자 료

- 88 _____ 교육과학기술부 홍보 자료 - 좋은 교과서 만들기

- 91 _____ • 연구재단 소식
92 _____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93 _____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94 _____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사교육 대책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글 | **곽병선**
한국교육학회장

대통령이 직접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사교육 대책을 주문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사교육 대책을 안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에 기대를 걸 만한 안이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이미 어설픈 교육 정책으로 불신을 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획기적인 사교육 대책이라고 제안한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방안을 한나라당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보도는 무엇보다 정책 신뢰가 중요한 교육 정책을 놓고 현 정부가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최근 또다시 여권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 평가제로 바꾸고, 중학교에서 외고, 특목고 진학 시 특정 과목만 시험보게 한다는 등의 사교육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 대책은 반드시 수립돼야 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 체제와 결착돼 있는 전체 국가 교육 문제나 다름없는 고질적인 문제다. 때문에 선불리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육 문제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경험이 말해 주듯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성을 키워 주기 쉽다.

교육 경쟁력, 대입 제도, 사교육 등과 같은 교육 문제는 권력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정권 임기 내에 무엇인가 결말을 보여 줘야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세워 가며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서 추진하면, 반드시 우리의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더디게 보여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사교육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을 허약하게 하는 여러 왜곡된 교육 제도에서 오는 것이다. 첫째 원인은 인위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사교육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오만에 불과할 수 있다. 사교육은 여하한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비판론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둘째 원인 해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학교 공부만으로 불안하다고 여길 때 사교육은 기생한다.

해결의 큰 방향은 간단하다. 학교 교육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필요하고 충분 할 만큼 교육 서비스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하게 하고, 학교의 위상을 세워 주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게 해야 할 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을 확실 하게 주어 상급 학교 진학 시 학교 기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장래 희망이 있게 하는 학교 중심 학력 관리 관행을 세워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웬만하면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학업 성취 기준을 낮춰 학습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인성 교육, 시민 교육,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많이 쌓도록 해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평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상대 평가 방식에서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교 기록이 모든 진학 전형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고등학교 교육을 종속시키고 있는 대학 입학 시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 입학 사정관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수능 체제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고등학교 내신 제도를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신 기록이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가 되도록 해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내신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서 현재의 수능 제도를 내신과 연계시키는 방향의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잡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잡무가 많다. 학교에 행정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교사의 수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교수 학습 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대입 사정관제, 방과 후 서비스, 온종일 프로그램 운영, 경시 대회 우대제 폐지 등은 다소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근본책은 아니다. 심야 학원 금지는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사교육 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총체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망

글 | 김만곤 (남양주양지초등학교 교장)



최근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과서 제도는 교육과정에 대한 견해와 해석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책 자체로서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변천 과정과 함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장차 교과서의 발행 및 활용 측면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I. 교과서 제도의 변화 개관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어느 정도로 규정 관여 통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사용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영국이나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중등),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일부 주에서처럼 국가 또는 주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민간이 저작한 도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

는 나라도 있다(자유 발행제).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국 검 인정 도서 중 어느 한 가지를 주로 활용하면서 다른 종류의 교과서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느 한 가지 도서만을 사용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

교과용 도서 사용의 이러한 경향은,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의 요소인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학습 경험의 내용), 교육 방법(학습 경험), 교육 평가(학습 성과) 중에서 국가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얼마만큼(강하게 혹은 약하게) 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유 발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대체로 교육 목표와 교육 평가 부분을 비교적 강력하게 통제하는 반면,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정제는 국가가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관여하는 제도, 검정제는 국정제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러나 인정제보다는 직접적으로 혹은 보다 강하게 안내하고 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최근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정 도서를 검정 도서 혹은 인정 도서로 전환하고 있지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국 검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은 여전히 중앙 집권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은 국정과 검 인정제를 근간으로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해왔다. 특히, 국정제의 강화는 정치 체제의 변천에 따른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과 입학 시험 제도로 그 요인이 되었다.³⁾ 이러한 경향을 교육과정기별로 개관하면,⁴⁾ 제1차 교육과정기(1955년~)에는 초등 전 교과서와 중등 도의, 국어, 실과가 국정이었고 그 외에는 검인이었으나,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에는 교과서 판매 경쟁의 부작용을 축소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등 검인정 도서도 교과목당 7종으로 제한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에는 국사를 국정화하고 사회과도 단행본으로 편찬했으며, 1977년 3월의 이른바 ‘검 인정 교과서 파동’⁵⁾으로 검인정령이 폐지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상 국정(1종) 도서의 범위가 가장 넓어져⁶⁾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 도서 및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국민 윤리, 국사가 모두 국정이 되었고, 편수관이 직접 담당하던 국정 도서의 편찬이 모두 연구 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되었으며, 검정 도서도 교과목당 5종으로 더욱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 말~)에 이어져 모든 국정 도서의 연구 개발이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학에 위탁되었으나 1982년 초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정 도서의 범위가 초등학교의 전 도서, 중 고등학교 국어, 도덕(국민 윤리), 국사로 축소되었고, 이 시기의 국 검정 구분은 대체로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까지 이어졌으며,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1교과 다 교과서 체제’가 도입되어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과에서 국어처럼 여러 교과서를 활용하거나 사회, 과학에서처럼 보조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및 재량 활동 등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또는 교육감)이 심사, 승인한 인정 도서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인정 도서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특히, 인정 도서 중 인정을 위한 심의 없이 교과 전문가 3인 이상의 합의만으로 교과용 도서로서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유 발행제’의 장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고등학교 전문 교과 중 교육 대상이 극히 희소한 과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효과는 미미했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 교과를 포함한 721종의 국정 도서와 187종의 검정 도서, 134종의 인정 도서가 편찬되었다(인정 도서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서 85종; 보통 교과 8종, 전문 교과 77종 포함).

II. 최근의 교과서 정책의 변화

2007년 2월 말에 개정 고시된 이른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의 논리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이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국 검 인정 구분 고시에 의한 국 검 인정 도서 간의 양적 변화는 매

우 커서 국정 도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전문 교과 일부에만 남고 오래 동안 국정을 유지해 온 교과까지 검정으로 전환되었고, 인정 도서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8년 8월 28일의 초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 국정 도서이던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3~6학년 영어, 중 고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 중등학교 보건 과목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2008. 9. 11.)의 후속 조치 및 고등학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에 부합되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21일,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을 수정 고시했는데,⁷⁾ 그 내용을 보면 중 고등학교 보건 2책을 검정 도서에 추가하고, 전문 교과 필수 과목 및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국 검정 도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전문 교과의 국정 도서 71책을 인정 도서로 전환하는 한편,⁸⁾ 내용이 유사하거나 전후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 계열 과목 34책의 교과서를 17책으로 통합하였다. 초 중등학교 주요 교과에 대해서는 국정 혹은 검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정 교과서가 일부 남아 있고 검인정 교과서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정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검인정 교과서의 장점을 주장해 온 견해에 따라 일단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교육 목표와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에 대해 어느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가의

교육과정 논리로 보면, 이러한 조치들이 교육과정의 논리보다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정부는 자유 발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처럼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관여를 줄이고 교육 목표와 그 목표에 따른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단순히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여 나간다는 논리에 따라 국정 도서를 축소하고 검 인정 도서를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를 줄인다는 정책은 심지어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을 도외시킨 채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가 ‘학교 자율화 조치’ 중 학교장이 20%의 범위 내에서 어느 교과의 연간 학습 시간 수를 줄이거나 늘일 수 있다는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자율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작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⁹⁾ 그러한 자율화 조치가 얼마든지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교육과정 요소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자율화하는가의 과제는 단순히 정부의 행정적 규제를 줄여 나간다는 논리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정 도서를 확대하고 있는 정책도 단지 “그런 교과목의 교과서까지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와 “학교와 교사들의 수준이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논리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III. 최근의 정책에 따른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가령, 관점의 차이에 따른 편향성 논란 문제, 내용 표현상의 오류 문제,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과서 발행의 자율화와 선정의 합리화, 정기 검정제 도입, 교과서 연구 기관의 육성 등 허다한 문제에 따른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및 인정 도서의 확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¹⁰⁾

1.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 체제의 적용

국가 교육과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상을 유지해야 하며, 범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개정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교육 내용의 체계 및 일관성 유지,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객관적 질 관리의 기준, 교육의 중립성 확보, 국민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구현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이유로 지방 교육 자치가 발달하고 교과서 자유 발행제가 발달한 나라라도 국가 교육과정만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은 매우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3년 10월, 종래의 일시적 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바꾸어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 체계적으로 반영하

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 체제를 도입하고,¹²⁾ 이후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정(2004. 11. 26.), 공고 21 체제 교육과정 및 국사 교과 교육과정 개정(2005. 12. 28.), 수학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2006. 8. 2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07. 2. 28.), 보건 교육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08. 9. 11.),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2009. 3. 6.)을 연이어 추진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동향을 개관하면, 교육과정 수시 개정의 취지에 따른 긍정적 측면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반작용과 함께 자칫 교육과정 기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기준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개정 관리되는 데 비해¹³⁾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의 ‘총론’ 혹은 ‘각론(교과 영역)’의 개정 관리가 병행된다면 이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들만의 의견을 중심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면 범국민적 합의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초·중등 교육의 성격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이처럼 교육과정 기준에 소홀하면 교과서 정책에 대한 인식 또한 더욱 소홀해질 수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바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2. 초 중등학교 인정 도서의 확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초 중등 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써 엄격한 국가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 검 인정 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각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자유 발행제는 금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지향하는 자유 발행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며, 정부에서도 국 검정 도서의 인정화에 적극적이므로 이러한 경향으로써 점진적으로 자유 발행제를 병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¹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1월 21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2008. 8. 28.)의 내용을 수정 고시하면서, 중등학교의 경우 전 교과목의 지도서와 일부 전문 교과와 교과서를 인정화한 조치에 더하여 추가로 71책의 전문교과 국정 교과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했다.¹⁵⁾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 검 인정 구분 고시 내용은, 관점에 따라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동안의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이 지나친 정부 주도형이었으므로 그러한 형태를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로써 교과 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현장 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교원들이 이른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나 지도서를 연구 개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동일 교과목에 다수의 인정 도서가 개발 활용되는 경향이 일반화되면 우리 교육을 다양화하고 실제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교과용 도서 자유 발행제 도입의 길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을 들어야 한다면 현장의 인정 도서 연구 개발을 조장 지원하는 시책이나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원들이나 교과서 발행사들의 인정 도서 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연**

- 1) 심지어 뉴질랜드에서는 중등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자유 발행제이고, 초등의 경우에는 국정 교과서도 있고 민간이 발행하는 교과서도 있으나 국정 교과서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일본 교과서연구센터, 1999, 『외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사정에 관한 조사 연구』를 번역한 교육인적자원부, 2005, 『외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상황』 참조).
- 2) 우리나라 교과서의 법률상의 위상과 기능,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 막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에서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제3조 제1항)이 잘 보여 주고 있다.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을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인정 도서의 인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광병선 이해영, 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개혁심의회 위탁 과제 답신 보고서), 85~86쪽 및 김재복 함수곤 구자익 김홍원, 2002, 『편수 제도 개선 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 과제 답신 보고서), 14쪽.
- 4) 광병선, 1994,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48~51쪽, 김재복 외, 2002, 『편수 제도 개선 방안 연구』(교

- 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 과제 답신 보고서), 12~16쪽, 허강 광상만 김용만 정태범 함수곤 한명희 이경환 이종국, 2000, 『한국 편수사 연구(I)』(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학술 연구 보고서), 43~44쪽 참조.
- 5) “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를 독점으로 제작, 공급해 오던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가 교과서 내용 수정과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문교부 담당자들과 결탁, 뇌물을 주었던 사실이 밝혀져 편수국장 등 13명이 구속되고 16명이 1977년 3월 15일 입건되었다 (하략).” 당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세칭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모든 편수관이 문교부를 떠났다. 그러나 1984년 3월 및 1990년 7월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허강 광상만 김용만 정태범 함수곤 한명희 이경환 이종국, 2000, 『한국 편수사 연구(I)』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학술 연구 보고서, 455~459쪽).
- 6)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정 도서를 ‘1종 도서’, 검인정 도서를 ‘2종 도서’라고 지칭하여 왔다. 현재는 물론 종전대로 국정 도서, 검인정 도서라고 한다.
- 7) 2009년 1월 21일의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의 국정 도서는 교과서 117책과 지도서 68책, 전자 저작물 27종, 음원 자료 2종, 검정 도서는 교과서 11책과 전자 저작물 4종, 지도서 11책이 되었고, 중학교의 국정 도서는 생활 외국어 교과서 5책과 듣기 자료 5종, 검정 도서는 교과서 56책, 인정 도서는 지도서 28책, 교사용 음원 자료 3종, 고등학교 보통 교과와 국·검·인정 도서는 외국어와 교양의 교과서 3책, 듣기 자료 2종, 검정 도서는 교과서 89책, 인정 도서는 교과서 2책, 지도서 7책, 교사용 음원 자료 1종,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국·검·인정 도서는 교과서 249책, 검정 도서는 교과서 14책, 인정 도서는 교과서 154책이 되었다.
- 8) 국정 도서였던 것을 인정 도서로 전환한 71책은 과학 계열 15책, 예술 계열 9책, 외국어 계열 32책, 공업 계열 5책, 상업 정보 계열 4책, 수산 해운 계열 1책, 가사 실업 계열 5책으로, 이로써 국정 도서는 530책(2008. 8.)에서 442책으로 줄어들었다(2009. 1. 21.,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참조).
- 9) 2005. 6. 10(금).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주최, 2005 교육 인적자원 혁신박람회 학술 세미나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과 발전 방안」, 25~26쪽, 2005. 7. 14(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7주년 기념 세미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62~64쪽, 2005.11. 29(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공청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78~81쪽.
- 10) 줄고 「교과서 제도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육신문사, 2009. 5., 『2009 한국교육연감』, 42~62쪽의 내용을 부분 수정함.
- 11)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및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pp. 12~13.
- 12) 교육과학기술부(2008), 상계서, p.91 참조.
- 13)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광병선 등은 자유 발행제에 대해 ‘약한’ 의미, ‘보통’ 의미, ‘강한’ 의미의 자유 발행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약한’ 의미나 ‘보통’ 의미의 자유 발행제는 저작 → 발행 → 인정의 절차를 거치지만 ‘강한’ 의미의 자유발행제는 비교과용 도서가 사용 가능한 형태이며, ‘약한’ 의미의 자유 발행제는 국가 교육과정의 지침과 인정 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된 인정 도서 목록에 한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광병선 문용린 한명희 윤기욱 김미숙 김재춘(2004),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p. 89.
- 15)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의 인정 도서’는 시·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 도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특별 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 도서’이나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의 교양 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 활동 지도서도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 21.,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및 설명 자료 참조).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



글 | 이화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학문의 성과가 잘 반영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에 근거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저자와 출판 관계자는 물론이고 현장 교원, 학계에서도 우리 나라 교과서가 어떤 원칙과 절차에 의거하여 개발되고 있는지, 현재 교과서 제도에서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 교과서의 종류, 교과서 종류의 변화,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I.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 방법 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을 정한 기준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기준 결정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초 중등 교육법 제23조¹⁾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

정 기준이다. 법규 문서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교부령 제35호(1954. 4. 20.)로 공포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²⁾이었다. 최근에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제7차 교육과정(1997. 12. 30.)과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2. 28.)이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에서 기본 지침 이외에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지역 수준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급별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총론)과 각 교과별 교육과정(각론)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과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교과 교육과정, 일명 각론)에 제시된 각 교과의 성격, 목

표, 내용 체계를 반영하여 만든 교수 학습 자료로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성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거 만들어진 교수 학습 자료라고 해서 모두 교과서라고 볼 수는 없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거 만들어진 교수 학습 자료 중에서 관련 규정(현재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편찬 심의 검정 인정되어 교과용 도서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자료만이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II. 교과서의 종류

1. 교과용 도서의 구분

교과용 도서는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과서와 지도서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주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라고 하고, 교사용을 지도서라고 부른다.

교과용 도서는 저작권자에 따라 국정 도서와 검 인정 도서로 나눌 수 있다. **국정 도서**는 저작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도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편찬하거나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도서이다. 최근에는 국정 도서 편찬 기관을 공모 선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에서 개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 심사를 받아 합격된 도서를 **검정 도서**라고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정 심사를 받아 합격된 도서를 **인정 도서**라고 한다.

현재 검정 심사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인정 심사 업무는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다만, 인정 도서 중 일부 국립 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도서에 대한 인정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과서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국정 검정 인정 도서로 구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이를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라고 부른다.

2.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의 차이점

인정 도서는 검정 도서와 함께 검 인정 도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종류 모두 민간에서 개발하고 국가의 심사를 받는데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많다.

첫째, 개발 주체가 다르다. 검정 도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개발하는데 반하여 인정 도서의 개발 주체는 명확하지 않고 다양할 수 있다. 현재에는 현장 교사, 민간 출판사에서 개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³⁾에는 인정 승인의 주체인 시·도 교육청이 개발하기도 한다.

둘째, 시장성이 다르다. 민간 출판사에서 적정한 이윤을 기대하고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문 부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주문 부수가 예상되는 도서는 검정 도서로 구분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예상 주문 부수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앞의 두 가지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시장 예측성 여부 및 정부의 역할’이다.

검정 도서의 경우 정부에서 승인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게 된다. 검정 기준 사전 예고 등을 통하여 정부는 민간 출판사의 적정한 투자를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민간 출판사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정 검정 인정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현장 교원이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서가 국정 또는 검정 도서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 도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서에 대하여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사용을 승인해 주는' 인정 도서 제도⁶⁾에서는 정부가 인정 도서 시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 예측이 어렵고 승인에 있어서 정부가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인정 도서는 그 개발 주체가 분명하고 시장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검정 도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의 차이점을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심사'와 '선정 채택'의 시간적 선후 관계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학교 밖 심사'를 통하여 선정 목록이 작성된 후, '학교 내 선정 채택'이 따르는 제도가 '검정 도서'이다. 이에 반하여 '학교 안 선정'을 통하여 사용할 도서를 실질적으로는 선정⁷⁾하고 해당 도서에 대한 '학교 밖 심사'를 통한 사용 승인을 얻는 제도는 '인정 도서'라고 할 수 있다.

3. 인정 도서의 종류(인정도서심의회 필수 여부에 따라)

인정 도서를 다시 시·도 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 필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대부분 인정 도서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의무를 면제받은 인정 도서도 있다.

인정 도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되는 점에서는 검정 도서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미리 정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에 명기⁸⁾되는 인정 도서가 이러한 인정 도서의 범주에 들며, 이러한 인정 도서를 일명 '심의 없는 인정 도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당해 교과목의 교원 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도 해당 교과 교육과정에 적합하다면 인정 승인을 받아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없는 인정 도서'는 자유 발행 제도에 한 발 다가선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교과용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문에 명시되지 않아 인정도서심의회 승인 대상이지만, 시·도 교육청이 개발하는 도서는 해당 교육청 인정 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4. 인정 도서의 종류(사용 목적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정 도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첫째,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로 개발된 교과용 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는 과목이 표기되어 있으나,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교양 과목군에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과목이 있으나,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정 및 검인정 구분 고시(제1998-17호, '98. 12. 12.)에는 이 과목에 대한 도서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이 과목은 해당 교과용 도서가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로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교육장)의 판단에 따라 시·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승인을 받은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이미 개발된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가 있으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 도서를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Ⅲ. 교과서 종류의 변화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면, 해당 교과목에 대한 교과서를 어떤 종류로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를 하게 된다.

우리 부에서는 2007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 지금까지 4번의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를 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최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구

분고시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2007. 6. 22.)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정(2007. 2. 28.)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국정, 검정, 인정으로 처음으로 구분한 고시문이다.

이 고시문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교에도 검정 도서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과, 체육, 음악, 미술(이상 5, 6학년), 영어(3~6학년) 교과서 및 지도서를 검정 도서로 구분하였다.

중등학교급에서 큰 변화는 지금까지 국정 도서로 개발해 오던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를 검정 도서로 전환하였고, 선택 과목인 생활 외국어 중 선택 수요가 있는 생활 중국어와 생활 일본어 교과서를 검정 도서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중등학교 보통 교과목의 도서는 대부분 검정 도서로 구분되었고, 중학교 생활 외국어(5개 과목), 고등학교 아랍어(2개 과목), 신설된 고등학교 '안전과 건강' 과목의 교과용 도서 및 특별 활동 지도서만이 국정 도서로 남게 되었다.

한편, 미술 교과와 경우 2개 학년 교과서를 합본으로 구분 고시(초등 3~4학년, 5~6학년, 중등 1~3학년)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2호 (2007. 8. 7.)

우리 부는 6월 22일자 구분 고시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기도 전에 8월 7일자로 구분 고시를 수정하게 되었다. 8월 7일자 구분 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중등학교 교과목 중 검

정 도서로 구분된 교과서의 지도서를 인정 도서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검정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건의를 우리 부가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전문 교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것이다. 6월 22일자 구분 고시문에는 전문 교과에서 국정 도서를 343책, 검정 도서를 10책, 인정 도서(심의 없는)를 82책으로 구분하였으나, 8월 7일자 구분 고시문에 따르면 국정 도서를 337책, 검정 도서를 14책, 인정 도서(심의 없는)를 83책으로 구분하였다. 국정 도서에서 검정 도서로 전환된 도서는 4책으로서 모두 상업 정보 계열 교과이며, 상업 정보 계열 중 1책(전산 회계), 과학 계열 중 1책(과제 연구)이 국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 전환되었다.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7호 (2008. 8. 28.)

교사용 지도서를 인정 도서로 대거 전환한 2007. 8. 7. 구분 수정 고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시 도 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고, 검정 도서인 교과서 채택이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지도서의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 도서 신청 기간(해당 학기 6개월 전)이 부족하게 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듣기 자료(CD) 등 보조 자료가 지도서와 함께 인정 도서로 전환됨으로써 교과서 채택 심사에 애로가 발생하였으며, 교과서만으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조화로운 교수 학습을 보장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정부 조직 개편(2008. 3.)에 따라 교육인

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국어, 도덕, 사회, 역사 교과목의 지도서는 제외)를 시 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인정도서(일명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심의 없는 인정 도서는 사용 학기 3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학교에서는 교과서 채택(8월 말) 후 인정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심사 채택 교수 학습에 필수적인 보조 자료(CD)를 교과서(또는 지도서)와 함께 개발하도록 하였다.⁷⁾ 또, 중등학교 특별 활동 지도서를 국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 전환하게 되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호 (2009. 1. 21.)

우리 부는 '교과서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 국정 도서의 일부를 인정 도서(심의 없는)로 추가 전환하였다. 과학 및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국정 도서를 모두 인정 도서(심의 없는)로 전환하였고, 외국어 계열의 경우 교육과정상 필수 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도서를 인정 도서(심의 없는)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전문 교과는 국정 도서 249책, 검정 도서 14책, 인정 도서 154책으로 구분되었다. 국정 도서의 인정 도서 전환 이외에도 계열성 있는 일부 과목의 도서를 1권으로 통합 개발하고, 일부 도서는 기존 도서를 수정(개편)하도록 구분 고시하였다. 교육과정 기별로 교과서의 종류별 종수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계
제6차 교육과정	827(80%)	123(12%)	85(8%)	1,035
제7차 교육과정	721(69%)	187(18%)	134(13%)	1,042
2007 개정 교육과정	537(56%)	181(19%)	239(25%)	957

IV.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

1. 인정 도서에 대한 인식 전환

현장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 사이에서도 교과서에 대한 위계 의식이 발견된다. 즉, 중요성과 위계에 있어서 국정 도서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검정 도서, 마지막으로 인정도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자신이 전공한 교과목의 도서가 인정 도서로 구분되거나 인정 도서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사용에 있어서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의 위계는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⁸⁾, 이러한 구분은 사용에 대한 위계일 뿐 교과서의 질 그 자체에 대한 위계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제도에서는 학교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유 발행제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⁹⁾

그러나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위의 두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종합한 새로운 입장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인정 도서를 개발하고, 이러한 인정 도서 개발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현한 교과용 도서 개발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국 교과서 제도에 대한 오해 불식

외국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은 검정 도서 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은 캘리포니아,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는 인정 도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자유 발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필자가 동 원고에서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를 구분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는 이러한 구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밖 심사를 통하여 선정 목록이 작성되고, 학교에서는 이 목록 중에서 선정 채택하는 제도가 ‘검정 도서’라고 하면, 미국 일부 주(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서 제도, 즉 주 교육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인정한 후 목록을 정하여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는 ‘검정 도서’ 제도에 가깝다고 본다.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미국의 경우 ‘adoption’)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밖 심사’와 ‘학교 내 선정’이라는 구조적인 틀과 이 둘 사이의 선후 관계에 따라 국내외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종류를 구분할 것을 제안해 본다. 프랑스에서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교과서 리스트 작성 후 각 학교의 담임 교사의 채택 및 사용’이라는 절차를 거치므로 프랑스 초등학교 교과서 제도도 인정 도서로 보기보다는 검정

아무리 좋은 도서를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학문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면
해당 도서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 도서의 경우에도 수정 보완 등을 통한
질 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도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개발 주체 및 방식 개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정 도서의 개발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 인정 도서 개발 주체는 검정 도서 개발에 참여한 발행사 저작자일 수도 있고, 현장 교원이 자신이 사용할 교과서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개발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미 발행되어 시·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일부 부합되어 국정 또는 검정 도서 보완을 위한 인정 도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 발행사¹⁰⁾가 개발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개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 도서의 또 다른 특징이 될 수도 있으나, 인정 도서 확대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교과서가 적기에 개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인정 도서 전환 초기에는 시·도 교육청 해당 부서의 관심과 이에 대한 개발 계획 또는 개발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 부에서는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새로 인정 도서로 전환시킨 전문 교과 교과서 71책에 대해서는 특별 교부금 등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교육청별 개발 도서 및 지원 금

액 등을 결정하는 데에는 기존 인정 도서 개발 실적 및 전문 교과 계열 특성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

4. 인정 기준 및 신청 권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 도서 승인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발행사에서는 인정 도서 신청 및 승인 기준 등에 대하여 우리 부에 문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발행사에서 인정 도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시·도 교육청별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인정 도서 제도의 특성상 언제 누가 해당 도서를 개발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시·도 교육청별 인정 도서 인정 기준 등을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인정 도서의 특성상 인정 기준은 검정 기준에 비하여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형 체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완화함으로써 인정 도서의 다양한 외형 체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정 도서 심의는 사용 승인의 성격이 강하므로 검정 기준과는 달라야 하며, 필수적인 인

정 기준의 요소가 무엇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정 도서의 신청 권한을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뿐만 아니라 검정 도서의 발행사에게도 부여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중이다.¹²⁾ 발행사에게까지 인정 도서 신청 권한을 주는 것은 ‘학교 안 선정’ 후 ‘학교 밖 심사’라는 인정 도서의 틀을 일부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과서가 검정 도서인 경우에는 지도서를 해당 발행사가 개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행사에게 지도서 인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발행사에 대한 인정 신청 권한 부여는 편의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교과서 개발에 대한 학교(현장 교원)의 자율권 신장을 오히려 더디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5. 발행 및 유통 체제 개선

인정 도서의 발행 및 유통 체제를 생각할 때 검정 도서의 체제를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정 도서의 경우, 검정 도서와 같은 발행 및 유통 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장 교원이 자신의 수업을 위해 도서를 개발하고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도서의 발행을 위해 발행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간단한 제본 등을 통해 도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인정 도서가 검정 도서와 유사한 발행 및 유통 체제를 가진다면 수요가 많지 않아 발행사에서 개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도서에 대해서는 발행 및 유통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정 도서의 발행 및 유통은 검정 도

서의 그것보다 좀 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6. 수정 보완 및 질 관리 체제 구축

인정 도서를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보다 낮추어 보는 시각을 가진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인정 도서는 국 검정 도서처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도서를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학문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면 해당 도서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 도서의 경우에도 수정 보완 등을 통한 질 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매년 수정 보완할 수 없다면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 도서 승인 시 사용 연한을 부여하고, 기한이 지난 도서는 수정 보완 후 다시 인정받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7. 시·도 교육청 조직 변화

인정 기준 개발 및 관리, 인정 도서 질 관리 등을 제대로 하려면 시·도 교육청 조직이 현재와 달라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에는 교과서 정책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으며, 초등 또는 중등 교육과, 때로는 교육과정 정책과, 학교 정책과 등에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의 한 가지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인정 도서를 적기에 개발하고, 인정 승인하고 관리하려면 시·도(지역) 교육청 조직이 교과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교육청에서 일하는 교육 전문직의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어야 한다. **연**

- 1)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차 교육과정 문서임.
- 3) 교육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서로는 초등 '우리들은 1학년', '사회와 탐구' 교과서를 들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개발하는 도서의 경우에는 시 도 교육청 인정 도서 업무 처리 지침 등에 의거 인정 도서 심의를 생략하고 있음.
- 4) 초·중등 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가 없는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용 주된 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 해당 도서에 대해 인정 도서 승인을 받아야 함. 또,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가 있지만 이를 보충하고자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도서로 승인받아야 함.
- 5) 학교의 장이 해당 도서를 인정 신청한다는 것은 해당 도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검정 도서의 경우 채택(선정)의 의사 결정과 유사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의 인정 승인은 검정 도서의 심사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6)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생략)"와 동 규정 제16조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에 따라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인정 도서임.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교과목을 구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문에 해당 교과목을 밝혀 주고 있음.
- 7) 초등 5, 6학년 음악 지도서에 음원 자료(CD)를 포함시키고, 중등 영어 교과서에 듣기 자료(CD)를 포함시켰음. 또, 초등 영어 교과과목의 경우 교사용 보조 자료(CD)를 삭제하는 대신 학생용 전자 저작물(CD)만을 검정 도서로 구분 고시하였음.

- 8) 제3조 (교과용 도서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광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2009년 (사)한국검정 교과서 회원사 춘계 세미나(2009. 5. 29.)에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발간한 교과서연구지(제56호, 2009. 4월 발행)에 게재한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서도 교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최소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 10) 이 경우, 민간 발행사는 반드시 교과서 시장에 참여하는 발행사일 필요는 없음.
- 1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 1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국정 및 검정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에 한하여 저작자 또는 발행자,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인정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하여 규정 개정 추진 중임.

교과서 인정 제도의 발전 과제

글 |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I. 인정 도서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초·중등 교육법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초·중등 교육법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이 규정은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교과서 사용의 교사 자율 재량을 제한하고 있다. 교사는 정부가 허용한 교과서 아닌 다른 자료를 교과서 대신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 도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도서이지만 국정 → 검정 → 인정의 순서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정 도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인정 도서’,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이다.

이와 같은 인정 도서의 사용 순서를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동법 제17조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제17조 (인정 도서의 사용 범위 등)

- ②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 도서를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정 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 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 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현 교과용 도서 정책 시스템에서는 인정 도서가 독자적인 교과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우선, 초·중등학교의 일반계 교과목 교과서는 대부분 국정이나 검정으로 되어 있으니, 인정 도서를 편찬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리고 보조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제17조 ②와 같이 정본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 도서는 독자적인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인정 도서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는 무엇일까? 그 배경은 먼저 인정 도서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적용되어야 될 목적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을 전제로 할 때만 교사의 교수권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볼 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과서 제도는 교사의 자율성보다 더 상위 가치이다. 그 학습권이 바로 교과서 제도의 존재 이유이고, 좋은 교과서 판단 조건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습자)에서 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볼 수 있다.

교육 기본법 제12조 (학습자)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밑줄 - 필자)

학습자의 ‘인격 존중, 개성 중시, 최대한 능력 발휘’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 내용과 교재의 조건이다. 이는 바로 교육과정(교육 내용)과 교과서(교재)가 지행해야 될 법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정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대통령령을 정해 놓았다.

물론, 학습권에 열거된 인격과 개성 및 능력 발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그것을 지원하는 교과서가 어떤 것인가는 한 가지로 말 할 수 없다.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는 정부가 밝히는 편찬 지침과 검정 기준을 통해 그 의미가 들어난다. 인정 도서에 대해서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심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16조 (인정 도서의 인정)

-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 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밑줄 - 필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가치 중립성이라는 최저 필수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 정도하에 국 검정 교과서 대신 또는 그 보완 자료로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정 도서는 검정 도서에 비하여 심의 조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교과서를 발행하기가 쉬운 것이 인정 도서의 특징이다.

II. 인정 도서의 미래는 어떠할까?

앞으로 교과서 제도의 추세는 장기적으로 인정도서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량 정보의 신속 전달과 전자 도서 발행이다.

교수 학습 자료가 적고 다양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에는 교과서가 교육 내용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인터넷 문명은 정보 소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국내 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자도서가 사용될 현실에서 전통적인 교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가치 중립성이라는
최저 필수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 정도하에
국 검정 교과서 대신 또는 그 보완 자료로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의 독점적 지위는 무너졌다. 앞으로는 인터넷 단말기가 교과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므로, 검정과 같은 정부의 심의권은 사실상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 전달 체계의 변혁은 바로 다양한 유형의 교과용 도서, 즉 인정도서 시대를 열어갈 시대적 배경이 될 것이다.

둘째는 교과서 진도 중심에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중심으로 변화될 교수 학습 방법의 변혁이다.

현재 교육과정의 내용은 대부분 주요 학습 요소를 열거하는 대신 학생이 성취해야 될 기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 모든 학교가 시행하게 될 학업 성취도 평가는 바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달성도 정도를 시험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특정 교과서에 한정시키지 않고 성취도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셋째는 중앙 정부의 권한 축소와 지방과 학교의 재량권 강화이다.

전국 획일성을 지향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은 다양화와 자율화를 가치로 하는 지방 분권화 시대에는 변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보아도

지방 교육청과 학교가 의사 결정을 할 사안이 많아질 것이다. 교과서 정책도 다를 바 없다. 현재 검정 교과서의 검정권은 중앙 정부가 위탁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행사하고, 인정 도서 심사권은 역시 위탁된 지방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 동향에 따라 지방 단위와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를 위하여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대체해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장기적인 추세일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정 도서 확산을 가로막는 우리 교육의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과서 진도 중심의 암기형 학습 문화와, 시험은 교과서 위주로 출제한다는 평가의 전통적인 기준이 그러하다. 교과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도를 마쳐야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중앙 정부가 허용하는 교과서 진도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과서 중심 교육 환경에서는 '질 높은 교과서'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과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시비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사회적 논

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교과서에 대한 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하고 있는 검정과 같이 엄정한 심사를 하여도 교과서 질에 대한 시비가 있는데 좀 더 완화된 인정제의 경우 정부가 그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 도서와 학교 자율성 제고는 교과서 질이라는 조건 이상의 시대적 힘을 갖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인정 도서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Ⅲ. 인정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과 같은 세계 개방 시대의 대량 정보 유통 사회에서는 정부가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 개발과 사용 과정을 규정하는 제도도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되어야 한다. 바로 국정에서 검정으로, 검정에서 인정제로 나가는 것이 교과서 발전 방향이다.

인정 도서는 교과서 제작과 채택 및 사용을 검정 도서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관련되는 과제를 찾아야 한다. 교사의 자율적인 교재 구성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정 제도의 역기능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인정제를 시행하는 데 나타날 수 있는 저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정제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교과서 심의 기준을 들 수 있고, 인정제의 역기능으로는 교과서에 대한 검증 소홀이나 교과서의 가치 편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 전환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관련자들이 유념해야 될 조

건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 조건을 교과서 발행과 심의 제도와 채택 및 사용 과정이라는 세 가지 부문과 교과서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정 도서 신청 제도를 보완해야 인정 도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현행 제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보자.

제14조 (인정 도서의 신청)

- ①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 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정 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의 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소속된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당해 교과목의 교원 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 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매우 복잡한 듯 보이지만 인정 도서 신청은 교육장이나 학교장만이 할 수 있다. 인정

지금과 같은 세계 개방 시대의 대량 정보 유통 사회에서는
정부가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 개발과 사용 과정을 규정하는 제도도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되어야 한다. 바로 국정에서 검정으로,
검정에서 인정제로 나가는 것이 교과서 발전 방향이다.

도서 집필자나 발행사는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를 검정 신청과 비교해 보자.

제8조 (검정 신청)

검정 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검정 신청은 저자와 발행사가 할 수 있으나, 인정 신청은 교육장과 학교장만이 할 수 있다. 즉, 검정은 공급자가 수요자를 찾지만, 인정은 반대로 수요자가 공급자를 찾아야 되는 제도이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발행사는 인정 도서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한 이 제도를 두고는 인정 도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안은 “제14조 (인정 도서의 신청) 인정 신청은 교육장(고등학교는 학교장)이나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다. 발행사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시장은 학교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가치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정 도서를 확대시키려면 교과서 심의 과정상 심의할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 심의 내용면에서 지금과 같은 교과서 검

정 기준을 필수 조건으로 최소화하여 교과서의 다양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과서가 갖추어야 될 최저 필수 조건은 ‘헌법과 법률 준수, 교육과정 내용 반영, 학문적 통설 및 편향성 배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독창적인 편집 디자인과 창의적인 내용 구성 및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제시 등¹⁾은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추가 조건일 것이다. 이 추가 조건은 정말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본 가치로 삼기 때문에, 정부가 심사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판단은 정부보다 사용할 학교가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어 해야 될 일이며, 이런 조건하에서라야 다양한 인정 도서가 인정될 수 있다.²⁾ 이는 앞에서 보았던 인정 도서의 심의 사유인 ‘민주적 기본 질서와 가치 중립성’과도 같은 논리이다. 즉,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 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도로 심의를 한정시켜야 한다.

셋째, 인정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교과서 채택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정 도서는 검정 도서에 비하여 심의 과정이 필수 조건 중심으로 연성화되기 때문에 교과서로서

학교 중심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형식과 규격을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도록 하여
외형만이 아니라 내용면도 질적으로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도록 하자는 인정제가 필요하다.

갖추어야 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의 기준을 최소화시킨다면 교과서의 질에 대한 시비도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채택할 때 분석하고 비교해 보아야 될 사안이 많을 것이다. 어느 과목이든 소수의 전공 교사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선택의 오차도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교과서 채택 단위를 개별 학교보다는 교육청 중심으로 광역화하여 다수의 전공자가 공동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개별 교사의 자율성보다는 채택 교재의 적절성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즉, 교사의 자율성과 교재의 다양성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채택 과정의 광역화를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이 요건은 검정 제도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인정 도서의 경우에 더욱 더 그러하다는 뜻이다.

넷째,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인정제도의 경우,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의 윤리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정도서 제도가 확산되면 교재 제작이나 채택 및 사용 과정에서 교사의 판단과 자율적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물론, 모든 교사는 자율성에 합당한 윤리성을 이행할 것이지만,

교육 기본법은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교육 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정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교원)

-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 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두 조항은 모두 교사가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치 중립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를 모아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정 제도에서는 물론 심사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교사가 어떤 자료를 어떤 관점에서 사용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끝으로, 교과서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인정 도서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과서 자체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법규의 교과서 정의를 보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이미 교과에 따라서는 서책 범위를 벗어나 전자 매체로 통하는 다양한 자료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전자 교과서가 보편화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유형의 교재를 어떻게 서책과 같이 일률적인 규칙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일정한 내용을 규격화된 틀에 맞추어 구성한 뒤,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들어 시장 진입 여부를 판정하며, 학교는 그것을 채택하여 진도 나가기 중심의 수업을 해 나가고, 시험은 교과서 내에서 낸다는 전통적인 교육을 계속 해 나간다면 학교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움될 자료라면 모두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교과서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아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사가 독자적으로 교재를 사용하는 이른바 자유 발행제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방 교육청이 인정해 주는 인정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검정 심사 과정을 통제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해야 된다는 정책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형식은 다양하지만 내용은 유사한 교과서를 다수 공급하는 것이 바로 검정 제도이기 때문이다. 학교 중심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형식과 규격을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도록 하여 외형만이 아니라 내용면도 질적으로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도록 하자는 인정제가 필요하다.

사실 현행 제도를 보면 검정과 인정을 명백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검정 제도를 통한 질 높고 시비 없는 교과서를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개발과 사용의 교사 자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 가치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점은 검정에 비하여 인정제가 더 가깝다. 인정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교과서에 대한 개념 전환과 자율성이 강화되는 이해 관계자 모두의 윤리성을 신뢰해야 가능한 일이다. **연**

1) 이런 조건은 좋은 교과서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편집 디자인이 더 좋고 나쁜지, 교수 학습은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맞다’, ‘틀렸다’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을 교과서 인정 여부의 판별 기준으로 삼으면 인정제도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도서를 유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도서를 찾도록 하면 될 것이다.

2) 한국교육방송(EBS)이 학부모 1,2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2009. 6. 19. 발표) 현행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천편일률적인 주입 암기식 교육(46.8%),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부재(29.5%), 교사의 전문성 능력 부재(11.8%)’였다. 천편일률적인 주입 암기식 교육이 교과서 탓만은 아니지만, 한 종밖에 없는 국정 교과서나 비슷한 체제의 검정 교과서로 진도 나가기 수업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가지 문제점은 교사가 학생 상황에 맞는 교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인정 도서 개발 현황

글 | 김병규 (사)한국검정교과서 사업본부장



I. 서문

어느 나라나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바탕을 둔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 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는 국정제 및 검정제를 축으로 국정 또는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와 신설 과목의 교재 보완을 목적으로 인정제를 같이 운용하고 있다.

과거 교과서에 대한 단상은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서 그 절대적 지위와 권위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과정이 변화하면서 교과서 역시 그 종수가 늘어나고 발행 형식도 다양해져 그 지위가 교육과정 속에서 여타 학습 자료와 더불어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과서 발행 제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정제를 검정제로, 또 이를 인정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바로 그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영어, 5~6학년 체육, 음악, 실과 등 중등학교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국어, 도덕, 국사(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검정제로 전환되었고, 선택 과목 중에서는 생활 일본어, 생활 중국어 등이 검정 도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검정 도서(초등학교 제외) 중 지도서가 모두 인정 도서로 전환되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상과 학문적 발전을 신속히 흡수하여 교육에 반영,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인정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국정제와 검정제를 보완하고 나아가 방임적 자유 발행제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정 도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자유 선택 과목인 철학, 교육학 등의 교과서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5차 교육과정기에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양 과목을 인정 도서로 개발,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 없는 도서제’를 도입하여 인정 도서의 활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저변을 넓혀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제와 검정제에 물적, 인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어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인정 도서 수요의 증가와 시장 참여

자의 확대 등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으나 제도는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의 인정 도서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인정 도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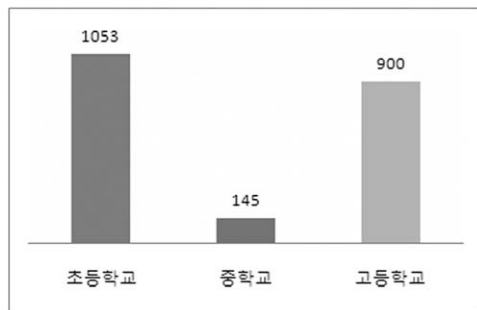
II. 인정 도서 개발 현황 분석

이 자료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40조(권한의 위임등) 2항²⁾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도서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료(<http://cutis.mest.go.kr>, ‘2009 인정 도서 현황’)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정 도서인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도서 13책(KICE 위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 시도교육감 인정 도서만을 조사하였다.

1. 사용 및 인정 주체별 현황

가. 학교급별 인정 도서 현황

현재 학교급별 인정 도서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인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인정 도서 비율이 전체 인정 도서의 절반(50%)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화 교과서 및 재량 활동 교과서 등이 인정 도서로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900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서가 많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인기 과목 및 전문 실업계 교과서가 국정 도서로 발행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학교는 전체 인정 도서 중 발행 비율이 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상 별도의 인정 도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의 부재가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림 1】 학교급별 인정 도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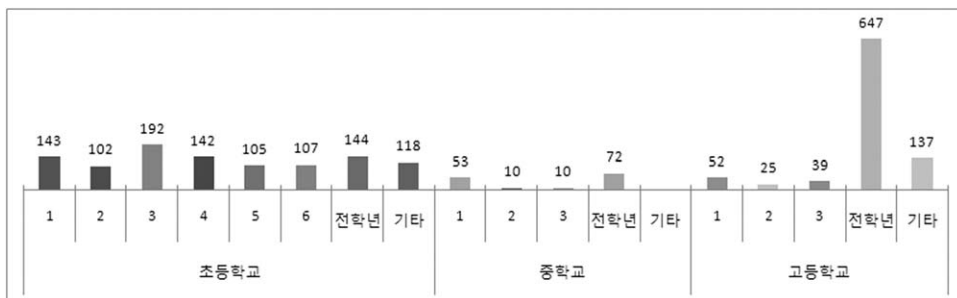
나. 학년별 인정 도서 현황

학교급별 인정 도서의 경우,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학년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고등학교 전학년이 사용하는 도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인정 도서가 192책으로, 단일 학년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의 사용 학년이 3학년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학년별로 쓰이는 책보다는 학교급별 전학년에서 사용하는 도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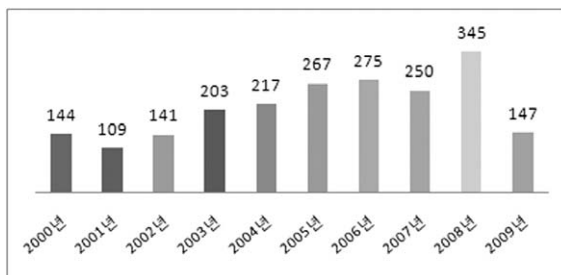
다. 그밖에 저학년, 고학년 두 개 학년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 학년별 인정 도서 현황

다. 연도별 인정 도서 현황
현재 사용 중인 인정 도서의 연도별 인정 추이를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2001년 이후 인정 도서의 인정 책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재량 활동 수업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국 검정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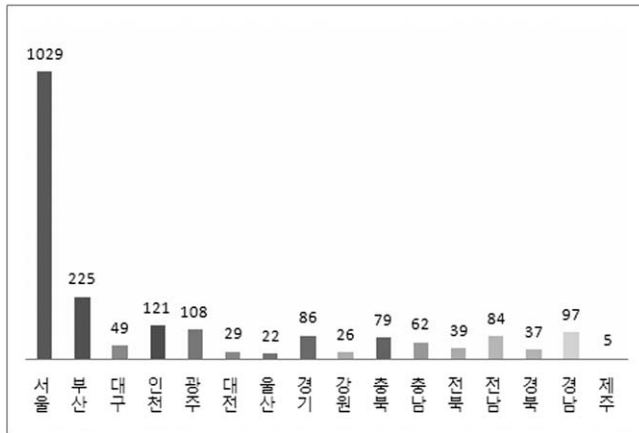
를 대신해 다양한 인정 도서가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국 검정 도서와는 달리 인정 도서의 인정 권한이 시 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매년 수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 도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림 III】 연도별 인정 도서 현황

라. 시 도별 인정 도서 현황
현재 인정 도서를 가장 많이 인정해 사용하고 있는 시 도 교육청은 서울로, 전체 인정 도서의 절반(49%)이 발행되어 쓰이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가장 낮은 5책의 인정 도서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1895개교, 173만)[※]로 이어 서울(1172개교, 130만)이 차지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서울로의 인정 도서 편중 현상

이 두드러지고 있다. 타 시 도 교육감이 인정 한 도서에 대해서 당해 도서에 대한 적합성 등의 절차를 자체적으로 거쳐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유사 과목에 대해 별도의 인정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려는 학교가 늘고 있고(단,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발행사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지역 편중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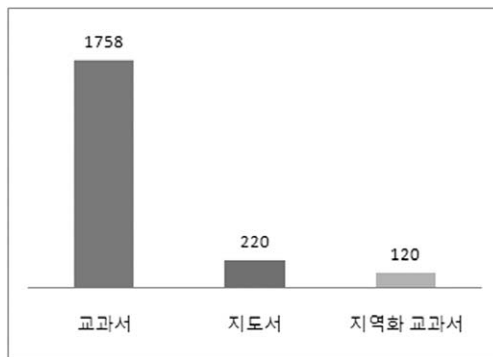
【그림 IV】 시·도별 인정 도서 현황

2. 인정 도서 종류별 현황

가. 종류별 인정 도서 현황

인정 도서의 종류는 크게 교과서와 지도서로 나뉘 볼 수 있다. 교과서는 1,878책(지역화 교과서 포함)으로 인정 도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도서는 220책으로 전체의 10% 비율로 나타났다. 교과서에는 각 시·도별 지역적 특색을 가진 지역화 교과서

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별도로 구분해 표기하였다. 지도서의 경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기존 중·고등 검정 지도서가 인정 도서로 전환되어 그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V】 종류별 인정 도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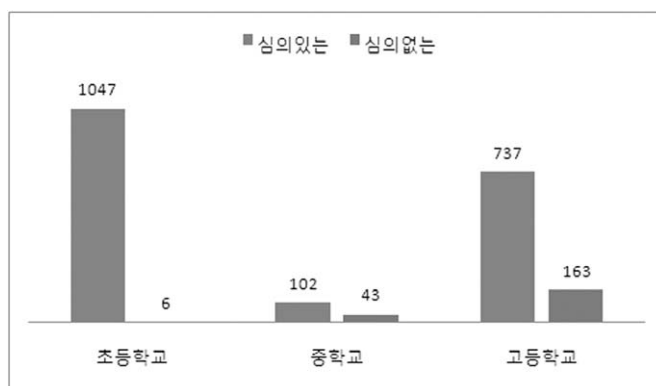
나. 학교급별 심의 유무에 따른 인정 도서 현황

인정 도서는 크게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 있는 도서’와 ‘심의 없는 도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인정 도서는 심의 있는

도서지만 고등학교 전문 교과를 중심으로 심의 없는 도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제7차 교육과정-78책, 2007년 개정 교육과정-83책). 심의 없는 인정 도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 관련 교과, 개별화 교육

이 가능한 예 체능 교과, 국제 교과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책에 대해 선정 사용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도서를 말한다. 이들 도서는 일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도서들로 별도의 제작 없이 기존 도서를 인정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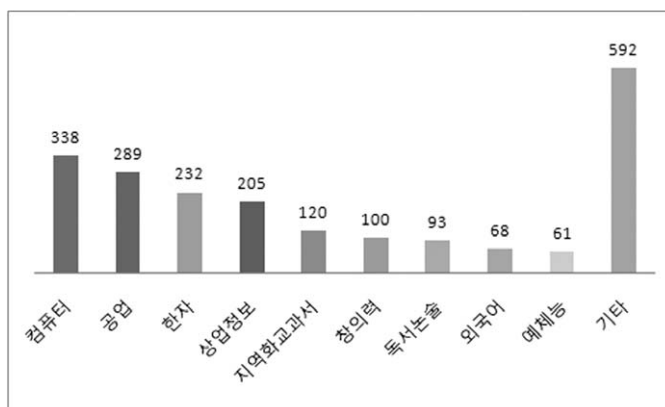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일부 지도서를 제외한(국어, 도덕, 역사, 사회) 모든 지도서를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지정함에 따라(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2008-147호) 그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VI】 학교급별 심의 유무에 따른 인정 도서 현황

다. 인정 도서 과목 계열별 인정 현황 인정 도서는 교육 자료의 다양성 확보와 자료의 보완,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재 등의 활용 취지로 발행되는 바 컴퓨터, 한자, 창의력, 독서 논술, 공업 및 상업 계열 전문 교과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인정 도서로 쓰

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한자 자격 시험 취득 붐과 IT 세대에 걸맞게 컴퓨터 등의 활용 교육이 늘어나면서 관련 도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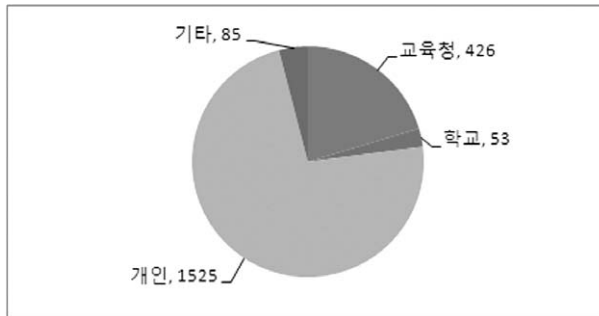
【그림 VII】 인정 도서 과목 계열별 인정 현황

3. 인정 도서 참여자별 현황

가. 저작자별 인정 도서 현황

현재 인정 도서의 저작자는 단독과 공동 저작을 포함해 개인의 비중이 1,525책으로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교육청이 저작자로 등재된 책은 426책으로, 지역화

교과서 및 초등학교의 ‘우리들은 1학년’ 과목이 대표적인 사례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교가 저작자인 책은 53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기타로는 시민 단체나 종교 단체, 전문 연구소 등 교과 관련 전문 기관의 참여도 일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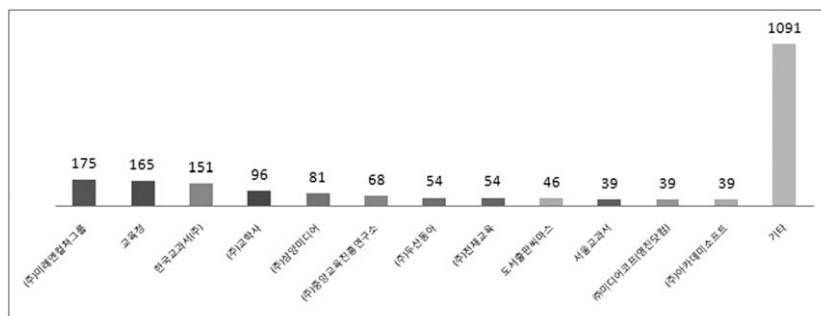


【그림 VIII】 저작자별 인정 도서 현황

나. 발행사별 인정 도서 현황

현재 인정 도서 발행사는 248개사로 아래 그림에는 상위 12개사와 기타 발행사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 결과 각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교육감 등이 발행한 인정 도서가 165책으로 (주)미래엔컬처그룹(구 대한교과서)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정 도서를 전문으로 발행하고 있는 한국교과서(주)의 발행 책 수가 151책으로 뒤를 이었다. 인정 도서 발행 상위 출판사 다수가 교과서 및 참고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출판사들로서 인정 도서에서도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행사들이 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인정 도서의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검정 교과서 개발 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정 도서를 통해 수익 창출에 나서면서 대형 출판사 위주로 시장 구조가 개편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책 이하 발행사도 122개사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점유율(8.3%)에서는 상위 발행사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X】 발행사별 인정 도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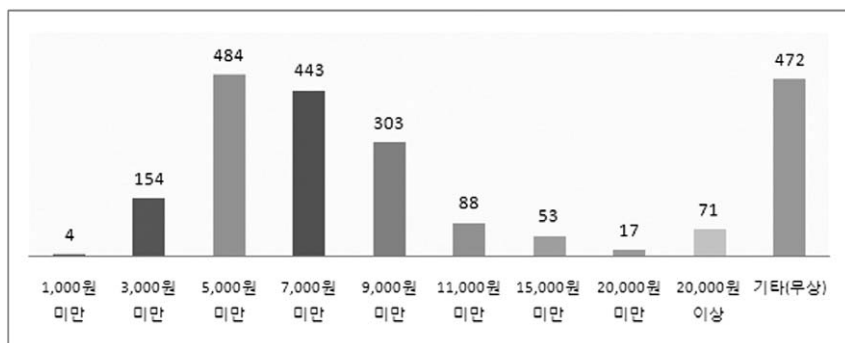
인정 도서는
교육 자료의 다양성 확보와 자료의 보완,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재 등의 활용 취지로 발행되는바
컴퓨터, 한자, 창의력, 독서 논술, 공업 및 상업 계열 전문 교과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인정 도서로 쓰이고 있다.

4. 가격 및 외형 체제 현황

가. 가격별 인정 도서 현황

인정 도서 중 정가가 책정된 도서는 1,626책(78%)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책들은 무상이거나 미정, 주문 부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가가 책정된 도서 중 3,000원 이상 5,000원 미만 가격대가 484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00원 미만의 도서가 443

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20,000원 이상 고가의 도서들 다수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 도서로 전환된 수학 영어 지도서들로 그중 (주)교문사의 중학교 수학1 지도서가 39,000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검정 지도서의 평균 가격이 약 8,200원(2009학년도 정가 기준 최고가 14,720원)인 것과 비교해 가격이 상당히 높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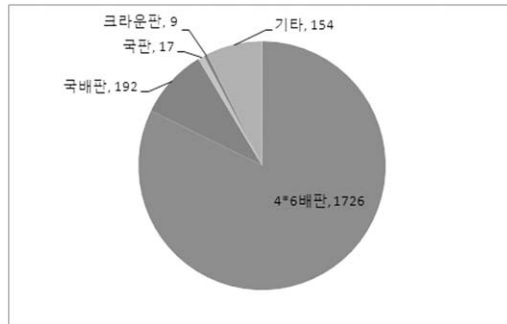
【그림 X】 가격별 인정 도서 현황

나. 판형별 인정 도서 현황

인정 도서는 별도의 외형 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도서들이 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본 판형인 4×6배판(변형 포함)이 1,726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밖에 국배판(변형 포함) 192책, 국판 17책, 크라운판 9책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A4, B5, 4×7~18판 등 다양한 판형이 혼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 인정 도서의 특성이 외적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각각의 판형이 학습자의 학업 능력, 보관, 사용 등의 문제들과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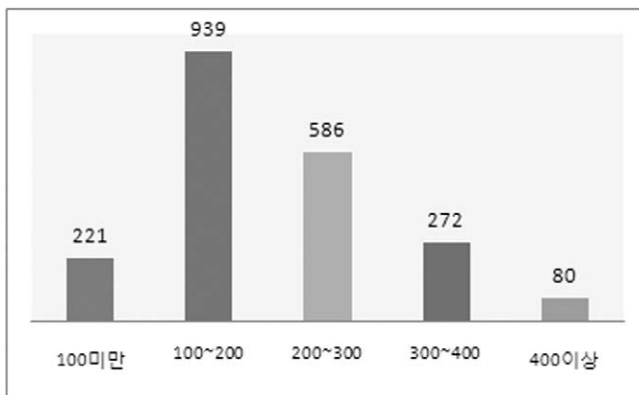


【그림 XI】 판형별 인정 도서 현황

다. 쪽수별 인정 도서 현황

판형과 마찬가지로 인정 도서 외형 체제에 있어 쪽수의 제한이 없는 관계로 최저 28쪽(충남-컴퓨터 워크북, (주)미디어코프)부터 최고 883쪽(부산-프리미어CS6, 혜지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징으로는 100쪽 미만 인정 도서 중 초등학교 인정 도서의 비율이 92%(203책)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0쪽 이상 책 중 고등학교의 비율이 86%(304책)로 나타나 사용자의 연령이나 과목별 특성에 따라 쪽수의 편성이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XII】 쪽수별 인정 도서 현황

III. 요약 및 전망

2009년 현재 국정 도서 990책, 검정 도서 1,589책, 인정 도서 2,098책으로 인정 도서의 책 수가 국 검정 도서를 넘어 매년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다양한 교과 자료에 대한 수요 증가, 국 검정에 비해 유연한 인정 심사 및 채택 시스템, 인정 신청 주체의 다양화, 출판사의 인정 도서 참여 확대 등의 여러 복합 요인에 기인하

인정 도서의 책수가 국 검정 도서를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다양한 교과 자료에 대한 수요 증가,
국 검정에 비해 유연한 인정 심사 및 채택 시스템, 인정 신청 주체의
다양화, 출판사의 인정 도서 참여 확대 등의
여러 복합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고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 추세에 따른 인정 도서 개발 현황을 우리는 앞서 다양한 시각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및 인정 주체별 현황으로 초등 및 전문 교과 중심의 고등학교 인정 도서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학년이 사용하는 도서보다는 학교급별 전체 학년이 사용 가능한 도서의 인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의 인정 도서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인프라와 수요층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칫 특정 지역에 인정 도서를 의존함으로써 당초 시·도 교육감 권한 위임에 따른 자율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과 업무 과중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및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는 물론 지역 분산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인정 도서 종류별 현황으로 전체 인정 도서 중 교과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교과서의 인정 지도서는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시행 이후 검정 지도서의 인정 전환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등 전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세부 과목군에 있어서는 컴퓨터 계열 도서가 가장 책 수가 많았고 이어 공업 및 상업 계열 고등 전문 도서 및 한자와 창의력, 독서 논술 과목군의 인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한자, 독서 논술 등의 특정 과목군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인정 도서 발행이 이뤄지고 있는바 이는 발행사의 수익 추구하고 다양성을 전제로 한 인정제의 특성상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전국 시·도 교육청의 업무 협조를 통해 무분별한 인정 남용이 되지 않도록 상호 보완책이 요구된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인정 도서 채택 시 다종의 도서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정 도서 참여자별 현황으로 인정 도서 저작의 주체는 개인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교육청과 학교가 인정 도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발행사들은 이미 국 검정 교과서 시장에서 입

지를 굳히고 있는 전문 출판사들이 대거 발행사 순위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정 교과서에 이어 인정 도서에서도 대형 출판사 위주의 시장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정 도서는 당초 지역, 학교 단위로 지엽적으로 인정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국 단위로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히려 검정 도서와 같은 지위를 가진 인정 도서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채택과 다량의 주문 부수라면 질 관리 측면에서 검정 도서로의 전환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정 도서 시장이 전국 단위의 자율 경쟁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정 도서의 신청 참여자와 심의 과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책무성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격 및 외형 체제 현황으로는 인정 도서의 다양성을 반영하듯 다양한 가격대, 쪽수, 판형의 형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도서의 판형이나 종이 질, 쪽수 등의 외형 체제가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보관, 사용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관계로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외적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 도서에 대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도의 범주 아래 이해 당사 간의 상호 작용에 따른 현상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현 우리나라 인정 도서 개발 현황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인정 도서별 주문 채택 부수, 인정 도서 시장 규모, 시·도 교육청별 인정 도

서 관련 예산(학교별 지출 금액 포함) 등의 주요 데이터는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해, 총체적인 인정 도서 개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 자료들이 축적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정 도서의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질 관리를 위해 모든 인정 도서에 대해 사용 연한의 제한을 두고 재인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1) 이 글의 주요 내용은 홍후조 함수곤 윤광원 조성준,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6. 보고서의 인정 도서 현황 분석 자료를 참고하였다.
- 2)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②교육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교육 통계 서비스(<http://cesi.kedi.re.kr>) - 유 초등 통계(2008년 현재)

인정 도서 업무의 절차와 요령



글 | 윤광원 ((주)미래엔컬처그룹 상무)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 인정 도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도서와 일반 저작자나 출판사가 출원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교과용 도서로 승인을 받는 검정 도서, 그리고 교과서 또는 지도서가 없는 경우나 이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발행되는 인정 도서가 그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모두 국정 도서였으나, 일부 교과목이 검정 도서로 전환되었으며, 중·고등학교 일반계 교과서는 모두 검정 도서로 발행하게 되었다. 또, 기존 검정 도서였던 교과서들은 점차 인정 도서(특히, 전문계 교과목)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점차 국정 도서의 비중을 줄이고 검정 도서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향후의 개정될 교육과정에서는 주 5일제 학교 수업,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 교과목의 축소, 수학 능력 시험의 제도적 개선 등에 따라 학교 현장

에서의 검정 도서 및 인정 도서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인정 도서의 정의 및 필요성, 심사 제도 및 절차와 발행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인정 도서의 정의 및 필요성

1. 인정 도서의 정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2002. 6. 25. 전문 개정 대통령령 제 17634호, 1차 개정 2004. 6. 19. 대통령령 제 18429호 제2조 6항)’에서 “인정 도서라 함은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과의 신설이나 새로운 교과목이 개설되어 교과서나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보완 교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은 경우이다.

고시 제2008-147호))

- | | |
|--|--|
| ① 학과 신설 및 교과목 개설로 전혀 교과용 도서가 없는 경우
②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③ 중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종교, 교육학, 철학, 논리학, 심리학, 생활 경제 등)
④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교재(중학교 특별 활동 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 ⑤ 일반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예: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용 교재)
⑥ 국정, 검정 도서는 있으나 보완 교재가 필요한 경우
⑦ 중 고등학교 검정 도서의 지도서(국어, 도덕, 사회, 역사 제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7호) |
|--|--|

【국정, 검정, 인정 도서의 구분】

- ▶ 국정 도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갖는 도서
- ▶ 검정 도서: 민간이 저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검정 업무 위탁)
- ▶ 인정 도서: 국 검정 도서가 없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시 도 교육감에게 인정 권한 위임)

구분	교육청 심의 인정 도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의 인정
심의 여부	○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단, 교육청 주관 개발 도서는 교육청 인정 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구분 고시문 표기	○ 구분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음.	○ 구분 고시문에 표기됨.
인정 신청 기한	○ 사용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	○ 사용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 전

2. 인정 도서의 필요성

인정 도서가 필요한 까닭은 국정이나 검정 도서 외에 인정 도서를 통하여 교과용 도서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다양성과 융통성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과정의 개편 주기로는 그 변화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여건에서 사회적 교육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과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정 도서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정 도서가 필요한 경우의 예이다.

【인정 도서가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교육청)

- 교과서 또는 지도서가 없는 경우
 -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에 사용할 교재
 - 중학교의 선택 교과 교재
 -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재(종교, 교육학, 철학, 논리학, 심리학, 생활 경제,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기타)
 - 국정 검정 도서가 없는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재
 - 인정 도서 또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전문 교과 교재
 - 실기 실습 등으로 교과서 개발 계획이 없는 전문 교과 교재
- 교과서 또는 지도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재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하는 경우
 - 초등학교 사회과(3학년) 지역화 교재
 - ‘우리들은 1학년’ 입문기 교재
 - 초등학교 사회과(4학년, ‘서울의 생활’) 지역화 교재

Ⅲ. 인정 도서의 심사 제도 및 절차

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임.)

인정 도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정 도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정권자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과의 적합성 및 표현 표기상의 오류 여부 등을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인정 도서의 신청, 심사, 가격 사정, 인정 및 인정 취소의 규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이

1. 인정 도서의 신청

가. 신청(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지역 교육장 또는 고등학교장(공 사립)이 인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신청(국립의 각급 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청)한다.

【인정 도서의 신청】(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 신청권자	인정권자	인정 신청 대상 도서
① 초 중학교장(교육장 경우) ② 고등학교장 ③ 국립의 대학 또는 교육대학 부설이 아닌 국립의 각급 학교장 ④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장(교육감 경우)	교육감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 도서
⑤ 교육장	교육감	
		○ 관할 구역 안의 유치원 및 초 중학교에서 사용이 필요한 인정 도서

나. 신청권자 및 인정권자(규정 제14조, 제40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인정 도서 승인 신청권자이지만,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에게는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청권은 오직 학교장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신청 시기(규정 제14조 제1항): 인정 도서를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인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인정 도서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승

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신청 시기에 “다만, 규정 14조 제3항에 의한 인정 도서(심의 없는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별 심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신청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라. 신청 서류: 인정을 신청할 때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인정 도서 신청시 필요 서류】(서울특별시교육청)

1. 인정 도서 인정 신청서
2. 심사본 10부
3. 저작자 이력서 각 1부
4. 저작자 대표 선임장 1부
5. 책별 정가 계산서 1부
6. 출판사 등록 증명서(원본) 1부
7. 인정 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 1부
8. 인정 도서 사용의 필요성 및 사유(학교) 1부
9. 인정 도서 사용 계획서 1부
10. 서약서 1부
11.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재(방송용의 경우) 사용에 관한 시 도 교육감 협의서 1부
12. 인정 도서 인정 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 심의 없는 인정 도서(신규 개발) 신청

- 인정 도서 신청 서식과 같음.

※ 심의 없는 인정 도서(시중 유통 도서 사용의 경우) 신청

- 심의 없는 인정 도서 신청서
- 심사본 3부
- 인정 도서 사용의 필요성 및 사유(학교) 1부
- 인정 도서 사용 계획서 1부
- 교과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사본 1부

2. 인정 도서의 심사

인정 도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계획을 세운 후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개 2~3차례 정도의 심사를 하게 된다.

가. 심사 계획의 수립: 심사 계획에는 심사 일정 및 장소 결정, 심사 방법, 심사 기준 및 심사 유의서 작성, 소요 예산 검토, 인정 수수료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인정 도서 심사 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심사 일정 및 장소 결정

- 심사 일정은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기간으로 정하고, 심사 장소는 공정한 심사, 심사의 편의 및 보안에 적합한 곳으로 한다.

심사 방법

- 심사는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하고, 2차 심사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는 2차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 도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교재에 대하여는 1차 및 2차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 후 심의본 제출은 사용 학기 시작 2월 전까지 인정도서심의회로 한다.
-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경우 학교별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신청한다. 이 경우 1, 2차 심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되,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 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규정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항】
- 인정 도서의 인정 기준은 교과목별로 교육감이 정한다.【규정 제15조, 제40조 제1항 제2호】

심사 기준 및 심사 유의서 작성

- 심사 기준 및 심사 유의서를 심사 전에 작성하고 심사 시작 전에 심사 위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 교과 심사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촉된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교과 심사 기준안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심사할 수 있다.
- 교과 심사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전에 위촉된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교과 심사 기준안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 1차 심사 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 기준으로 구분한다.
 - － 공통 기준: 국가 정책, 교육 목적, 교육 내용상의 적합성 여부와 집필상의 공정성 등 심사
 - － 교과 기준: 교과 특성에 따라 필요 사항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100점 만점 평가
- 2차 심사 기준은 1차 심사 결과 수정 보완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와 표현 표기 및 편찬 체제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 기타 추가 수정 사항 등으로 작성한다.

○ 심사 유의 사항은 1, 2차 심사별로 각각 작성한다.

※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인정 도서 심사 기준은 학교에서 정하되, 공통 기준은 교육청 기준을 준용한다.

소요 예산의 검토

- 심사와 관련된 비목별 소요 예산(관서 운영비 및 업무 추진비 등)을 심사 계획에 포함한다.
- 인정 도서 심사 업무와 관련한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을 매 회계 연도 본예산으로 확보한다.

인정 수수료

- 인정 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시는 저작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 제13조】
- 저작권자가 교육청(지역 교육청 포함)인 경우에는 인정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의 구성(규정 제14조 제13항): 심사위원은 대학 교수, 교육 전문가, 초·중등 교원 중에서 해당 교과 교육에 전문 지식과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 각 심사 단계의 심사위원의 수는 1차 심사는 5~9인, 2차 심사는 3~5인, 3차 심사는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 가격 사정 실무위원은 가격 산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교육 행정직 3인으로 정한다.

다. 심사 기준 및 절차: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감의 확인, 결재로 인정 도서가 된다. 다음은 인정 도서 업무 처리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심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이다.

【인정 도서 심사 및 심의】(서울특별시교육청)

제1차 심사

-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과 심사 유의 사항에 따라 심사하되, 인정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심사위원은 개별적으로 심사 유의 사항에 따라 공통 기준은 “있음”, “없음”으로, 교과 기준은 심사표에 평점으로 기재하여 1차 수정 검토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위원장은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표를 취합하여 인정 도서 심사 집계표를 작성하고 개별 심사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심사 집계표와 1차 수정 검토서를 제1차 심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한다.
- 심사 집계표와 1차 수정 검토서를 제출받은 후 심사위원장의 적격 판정을 받은 도서에 한하여 수정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1차 수정 검토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수정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 수정 보완의 범위는 저작자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공통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심사 위원 과반수의 개별 평점이 60/100점 이상이고, 개별 평점을 합산한 평균 득점이 60/100점 이상인 도서에 한하여 적격 판정을 한다.

제2차 심사

- 제2차 심사는 1차 심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 1차 심사 결과 수정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현 표기 및 편찬 체제 등에 대한 적합성 심사 결과 9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부'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 심사표는 심사 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필요 시 2차 수정 검토서를 첨부한다.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인정 도서 심의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인정 및 취소: 인정권자는 교육과정에
서 제시한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과의
적합성 및 표현 표기상의 오류 여부 등
을 인정도서심의회 심사를 거쳐 인
정한다. 불합격한 도서에 대해서는 수
정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다.

- 승인 사항 보고: 교육감은 인정 도서를 인정할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연 1회 보고

하여야 한다.(규정 제40조 제2항)

- 대장 관리: 인정권자는 인정 도서 사용 인정 시 이를 인정 도서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며,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심의 없는 인정 도서는 별도 대장으로 기재하여 관리한다.

마. 기타: 인정 도서의 사용, 수정,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 도서 사용, 수정 및 취소】(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 도서의 사용

- 인정권자가 인정 도서로 인정한 도서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에 따라 그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 그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규정 제17조 제1항】
- ※ 다만, 타 시 도 교육감이 승인한 인정 도서에 대하여는 당해 도서의 적합성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승인을 얻은 인정 도서는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없다.【규정 제17조 제2항】
-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 교과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학교가 인정 도서를 선정할 때는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규정 제3조 제2항】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나 검정 도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지역적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검정 도서의 심사 기준 못지않은
인정 도서의 심사 기준과 절차로써
인정 도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인정 도서의 수정

- 인정권자는 이미 사용 인정된 인정 도서의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해 인정 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규정 제26조 제2항】
- 수정의 요청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저작자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정 도서 승인 신청, 심사,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준용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을 승인할 수 있다.

인정 도서의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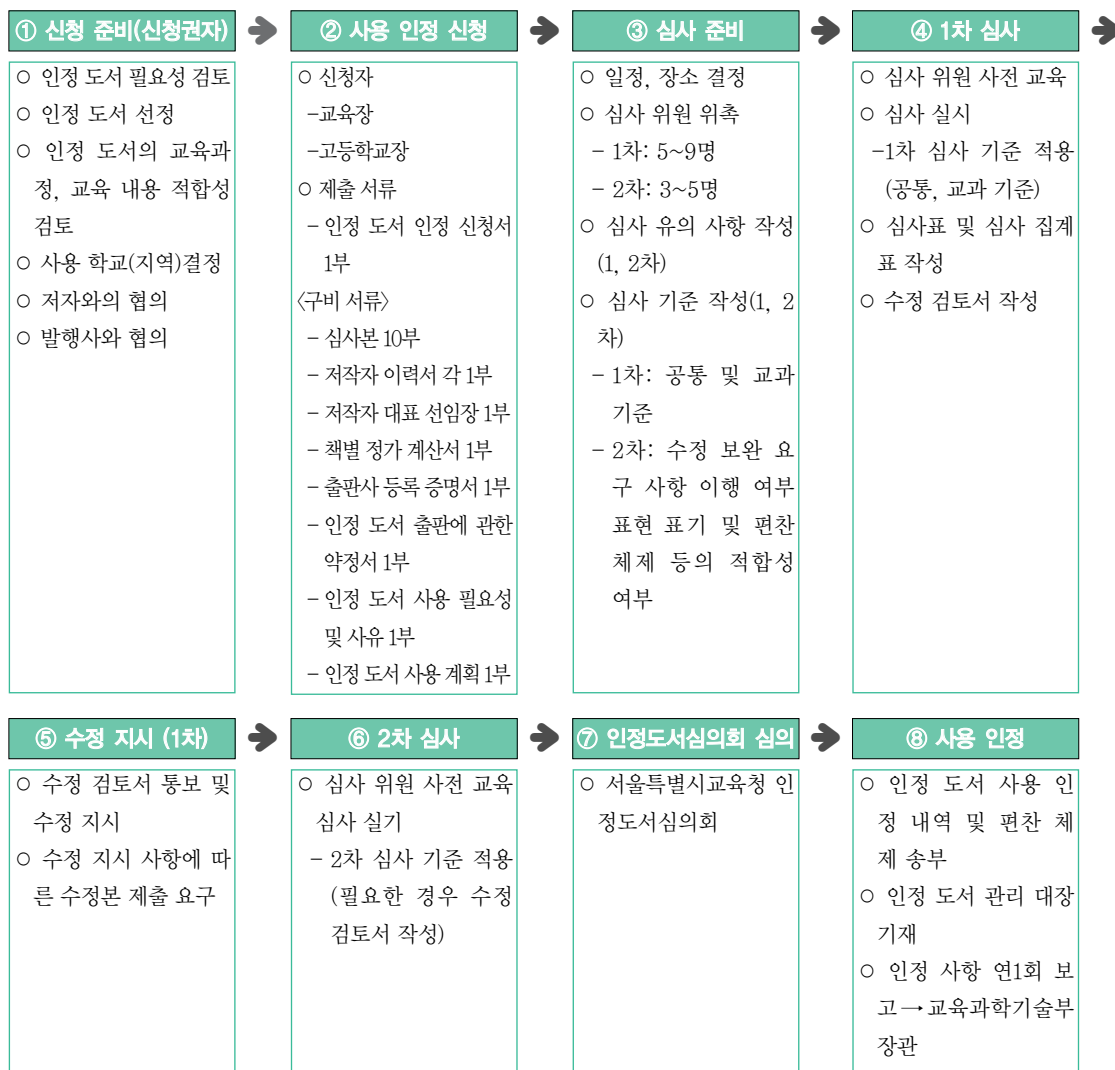
- 가. 교육감은 이미 사용 인정된 인정 도서의 교과목에 대하여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 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 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규정 제17조 제3항, 제40조】
-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규정 제17조 제4항】
 - 인정 도서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규정 제39조, 제40조】
- 나. 기타 취소의 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예
- 내용, 체제, 지질이 인정 내역과 다를 때
 - 저작자의 성명 표시가 인정 당시와 다를 때
 - 교육감의 사전 인정 없이 발행사를 변경한 때
 -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 저작자가 인정을 포기할 때
- 다. 인정 도서 신청 시 '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정 취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대표 저작자와 발행 예정자가 연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격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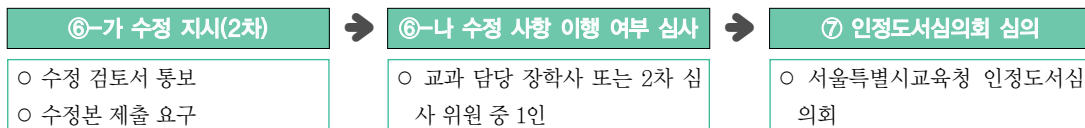
가격 사정은 조달청 원가 산정 원칙과 월간 물가 정보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원가를 근거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다. 통산 가격 사정 위원회의 산출 가격보다

희망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가격 사정 위원회의 산정 가격으로 낮추고,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출판사 제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인정 도서 신청 및 인정 업무 처리 흐름도(서울특별시교육청)



※ 2차 심사 수정 사항이 있을 때



4. 인정 도서의 채택

인정 도서는 그 필요성에 따라 출판하는 도서이므로 검정 도서처럼 채택과 관련한 구

체적인 법규나 절차가 없다. 다만, 타 시 도 교육청 교육감이 승인한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당해 도서의 적합성 등

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체 판단 절차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심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인정 도서 제도와 발행의 절차에 대해 서울을 대상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인정 도서 제도는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도입되었고, 그 인정 도서는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서 국정 도서, 검정 도서와 함께 사용되어 왔다. 교육과정 초기에는 국정 도서나 검정 도서의 비중에 비하여 그 역할이나 중요도가 낮아 많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교육과정기가 바뀌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수정 보완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며 활용도도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실수요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인정 도서가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점은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인정 도서의 개발, 심사,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정 도서의 신청(신청, 신청권자 및 인정권자, 신청 시기, 신청 서류), 심사(심사 계획의 수립,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 기준 및 절차, 인정 및 취소, 사용, 수정, 취소 등), 가격 사정, 채택 등이 그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터하여 세부 ‘인정 도서 업무 처리 지침서’를 작성, 인정 도서

개발 및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인정 도서는 학과의 신설이나 새로운 교과목이 개설되어 교과서나 지도서가 없는 경우나 사용하기 곤란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에 걸쳐 개발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정이나 검정 도서 외에도 교과용 도서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교육자료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또,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과정의 개편 주기로는 그 변화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여건에서 사회적 교육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과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정 도서나 검정 도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 때문에 인정 도서는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지역적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다원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학교 교육의 요구는 국정 도서나 검정 도서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보완적인 교과서 제도를 필요로 한다. 또, 초 중 고등학교의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의 활동 영역이 다양화되고, 전문계 교과목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인정 도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인정 도서의 다양한 개발은 이러한 필요를 뒷받침하기에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검정 도서의 심사 기준 못지않은 인정 도서의 심사 기준과 절차로써 인정 도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와 같은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개발되는 인정 도서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인정 도서의 필요와 요구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주요국의 진로 교육 및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연구¹⁾

글 | 강임숙
함안고등학교 교사



I. 서론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에 따른 도교육청 수준의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학생 선택권과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도되지 않는 진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진로 교육과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을 연구 활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외국의 개방적 교육과정의 사례를 검토하여 선진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을 선택하였고, 각국의 진로 교육과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을 집중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나 지식관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변화라는 시대적 요청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책임 있게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가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사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국가별 자료는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대한 인터넷 검색과 논문을 활용하였으며, 정책 제안은 각국의 자료 통찰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고용안정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최근 연구 보고서를 범위에 포함시켰다.

II. 외국의 진로 교육 연구

5개국의 진로 교육 연구 자료는 상당히 방대하지만 여기서는 각국의 진로 교육의 핵심만 간략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1. 미국의 진로 교육

미국의 진로 교육은 진로 교육 관련법인 Perkins I~IV법에 따라 진행된다. 이 법은 진로 교육이라기보다는 전문 교육 활성화 방안에 가깝다. 1984년에 제정되어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 양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저변

노동력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실업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보다 인문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교과들의 기본 교육 강화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학교 내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방법과 목표는 ① 역량 중심의 진로 개발 전략 제언(자기 이해, 교육과 직업 탐색, 진로 계획의 3영역을 초·중·고·성인의 4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와 영역별 핵심 역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습관을 추출) ② 총체적 학교 진로 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프로그램(진로지도 교육과정, 개인 설계, 책임 있는 학생 서비스, 그리고 체제 지원의 4요소로 구성)을 지원 하는 것이다.

진로 지도 프로그램에서의 특징은 체계적인 상담 제도와 개인별 진로 계획 기록부의 누가 기록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생의 진로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을 권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진로 판단 권고제는 진로 지도 교사가 학생 개인의 '진로 상담 기록부'를 누가 기록하여 진로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생활 기록부나 건강 기록부가 누가 기록되어 자료로 남는 것과 유사하다. 여기에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 진로 계획, 교육 계획 등이 포함된다.

2. 영국의 진로 교육

영국은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가진다. 다만, 국가는 영국의 학제에 따른 몇 단계의 Key Stage를 두고 교과 이수 시험을 통해 교육과정을 관리한다. 대학 진학, 직업 탐색과 같은 진로 교육은 의무 교육과 대학 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2년 과정의 상급 중등 단계의 교육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인문 교육과 전문 교육에 따른 과목을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자신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이 시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격과 성적에 따라 취업과 대학 진학이 결정된다.

국가는 상급 중등 단계의 진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IAG 프로그램(지역 교육청 산하의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있으며, 의무 교육 기간에도 학생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 지역 교육청 프로그램, 진로 검사 중심의 전문 기관인 Children Trust와 학생 개인 상담을 위한 Connexions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진로 전문 서비스'라는 지역 진로 상담 센터, 직업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학습과기술위원회'를 두고 다방면에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 교육의 자율화와 진로 선택 과정의 진로 전문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영국의 진로 교육이 가지는 자유롭지만 책임 있는 제도들이 있다.

- ① 대학에 입학하기 전 또는 직업 세계로 나아가기 전, 준비를 도와주는 교육 기관이 존재한다. 특히, sixth form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미리 공부할 수 있고 FE college에서는 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 및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자격증 취득 체제가 있는데 취업을 위한 자격증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이수로 인정되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어느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학교에서 이수하는 어느 과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율화

된 학교 교육을 국가 수준에서 책임지기 위해 개발된 영국 특유의 방법으로 해석된다.

- ③ 실업 교육과 인문 교육의 통합이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문계 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비해 영국은 실업 교육과 인문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초기부터 인문 교육만 받는 grammar school도 있고 실업 교육을 전문으로 받는 도시 기술 학교(city technical school)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인문 과정과 실업 과정을 통합한 형태의 종합 학교(comprehensive school)에 다니고 있다.

3. 캐나다의 진로 교육

캐나다는 모든 학교가 일반계와 전문계가 통합 운영된다. 학제는 취학 연령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초등 - 하급 중등 - 상급 중등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상급 중등 교육과정에 이르게 되면 필수 과목의 수가 줄어들고 직업 체험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대학 입시 요건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 이수하게 된다. 상급 중등 교육과정을 선택하기 전, 9학년이 되면 졸업을 위해 'Planning 10'이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진로 결정을 직접적으로 돕는 학습 계획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Planning 10'을 이수하면서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 세계의 재정적 정보까지 얻게 되며 이 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대학을 진학하느냐, 직업 세계로 이행하느냐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9학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10학년부터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졸업 프로그램(Graduation Program)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 목표에 맞게 비즈니스와 응용 비즈니스/예술, 디자인, 매체/건강과 여가/건강과 인적 서비스/교양과 인문/과학과 응용 과학/관광, 접대, 음식/무역과 기술 중 한 분야를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필수 과정 과목과 선택 과정 과목에서의 졸업 이수 학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학습을 설계한다. 학생들이 졸업 프로그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진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 교과과정을 수강하는 대신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 훈련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산업 훈련 프로그램(Industry Training Program), 중등학교 견습 프로그램(Secondary Apprenticeship Program), 진로 준비 프로그램(Career Preparation Program)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4. 오스트레일리아의 진로 교육

오스트레일리아의 진로 교육은 주정부 단위에서 책임 있게 진행된다. 우리나라 전문계인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과정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교육 자격 체계인 AQF를 통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과정은 우리나라의 전문 실업 교육의 일종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의 학생이 이를 선택한다. AQF(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는 영국의 자격증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자격증, 전문 실업 계열의 각종 수료증에 대한 자격 기준을 국가가 제시한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자격증은 학위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진학과

취업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의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다.

오스트레일리아 진로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직업 선택의 제한을 막기 위해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에 다양한 언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 또는 학교와 진로 전문 센터가 연계되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및 산학 연계를 통한 기업 학습, 지역 상담가 활용뿐만 아니라 학교 중도 이탈자를 위한 진로 상담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도 놀라운 점이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교육부는 학교 진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 공동체 및 사업체 파트너십을 통한 질 높은 진로 지도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5. 스위스의 진로 교육

스위스의 교육은 국가 수준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교육 제도 또한 획일적인 시스템이 없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은 우선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중등 I 단계인 5학년으로 진급할 때 기본 중급 고급 수준의 중등학교 진학으로 나뉘게 된다. 주에 따라서는 중등 I 단계에서 이러한 학교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취업 또는 진학을 위한 결정적인 진로 선택은 의무 교육을 마치는 중등 I 단계 마지막 학년인 9학년을 마치고 중등 II 단계로 진급할 때 이루어진다. 중등 I 단계와 중등 II 단계 사이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자유 선택 연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중등 II 단계에서는 다양한 마투라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우리와 다른 점은 모든 학생들이 주어진 교과 과정을 무조건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기본 과목을 제외하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스위스 진로 교육에서 인상적인 것은 진로 선택의 결정적 시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진로 전문 사이트인 ‘BIZ (<http://www.berufsberatung.ch>)’이다. BIZ는 진로 상담을 진학(Studium) 상담과 직업 선택(Berufswahl) 상담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는데, 직업 상담에서 직업 분야를 선택하면 직업군이 나타나고, 직업군을 선택하면 직업 활동 직업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상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각의 직업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면서 진로 상담을 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BIZ에서는 거의 모든 직종에 대해 약 130개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진로 교육 대상자들이 직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해 준다. 그 외에도 4개 국어가 공존하는 국가로서 국민들 간의 소통을 위해 언어 교육에 상당한 재정을 투자하는 것과 학생의 수준에 맞는 부진아 지도 과정과 선행 학습에 따른 조기 진급반의 개설 등 다양한 진학의 길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선진 5개국의 진로 교육과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을 집중 연구한 결과 각 국가별로 독특한 진로 교육의 방법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지니는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인도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적절히 안배하고 있다

는 것과 각국의 특징에 맞는 교육 제도를 이끌어간다는 점이었다. 그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 ① 교과 이수와 교과 선택의 과정이 곧 진로 교육의 과정이며
- ②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는 결정적 시기에 국가는 총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며
- ③ 학생은 자신이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과목을 선택하고
- ④ 교과의 이수는 학교 교과 이수, 국가가 제시한 자격증 획득, 국가 수준의 자격 시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양 과목과 단위 학교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선진 5개국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공하는 진로 교육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정책을 경상남도교육청의 2008년 교육과정 정책 연구를 통해 소개하였지만 우선 시급한 것으로,

- ①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는 결정적 시기에 활용 가능한 학교급별 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크리스트의 개발
- ② 다양한 AP 제도의 개발과 교과목 이수의 개방
- ③ 교과 교실제를 활용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부여
- ④ 영어 중심의 언어 교육에서 다양한 외국어 교육으로의 변화
- ⑤ 지역 교육청 단위의 순회 교사제 활성화
- ⑥ 고등학교 2학년에서 실시되는 선택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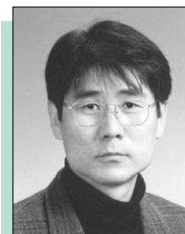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대상이 된 국가는 참으로 부럽게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과 진로 교육이 통합되어 있었고, 중등 단계 교육과정의 최종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학생이 자기 이해 직업 이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학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1) 본 연구는 2008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 과제로 실시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의 진로 교육과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2008. 경상남도교육청)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가 교육과정 개혁의 쟁점과 과제¹⁾

글 |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수



1. 한국 교육의 비운이 지속되고 있다

이홍우 교수의 1977년 연명 “교육의 운명이 오늘날처럼 기구했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본다.”는 30년이 지나고 21세기가 되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듯이 이는 한국 교육의 비운이며, 그 실체는 교육과정의 실종이다. 이홍우 교수는 30년 전 교육과정 모형을 목표 모형과 내용 모형으로 구분하고 목표 모형의 철학 없음을 비판하였다. 즉, 왜 그것을 가르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고, 그것을 시험으로만 재서 100점 맞는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해 버리려는 교육의 왜곡을 비판하였다. 한국 교육은 그 30년이 흐르면서 개선되기 커녕 악화되었고, 이제 교육의 비운을 넘어서 나라의 비운을 낳고 있다.

교육과정이란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 문제”이며, 아직까지 그 답은 인류 유산인 지식을 가르쳐 “열”을 심어 주는 일이다. 비극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어렵고, 더구나 지식을 가르쳐 열을 심어 주는 일이 더욱 어려워 시험 문제를 지식으로 대체하고 시험 점수를 열로 대체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홍우 교수는 이를 목표 모형이 가져온 비극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국 교육의 비운은 교육과정의 실종에서 비롯된다. 교육과정이 실종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시험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는 대체로 교과서에서 나온다.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그 시험 문제는 잘못된 문제로 ‘규정’되곤 한다. 물론, 그 교과서 밖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거나 가르쳐지지 말았어야 하는 지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나온 지식’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굳이 교육과정 분류를 따르면 한국의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거나 ‘교과서 교육과정’이라는 독특한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를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이런 관점에서 ‘교과서 교육과정’을 재해석해 보면 그것은 “이미 교과서에 그런 ‘탐구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교과서와 관련 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다. 즉,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의 문제는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이 구성해 내야 하는 지극히 교육

학생이 배워야 할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교육과정은 알려야 하는 단순한 문서적 지침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
보다 포괄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적 사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또는 듀이의 learning by doing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문제는 그 교사가 그러한 ‘사건’을 구성해 내려고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가정된다면 이미 그것은 ‘교육 사태’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그런 교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논의의 이야기이다.

2. 교과서에 갇힌 교육과정을 생각한다

한국 교육의 비운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자. 한국의 교사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구성해 내고 있는가? 한국의 학생은 그러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국의 교실에서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국가가 정한 ‘교과서’를 충실히 따르면 그만이다. 교과서는 거의 헌법과 같은 내용 체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매우 잘게 쪼개진 교육 목표로 분류되어 있으며, 또한 시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암기하는가 하는 것이 교육 방법의 모든 것들이다. 소위 ‘교육 사태’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내고 학생은 시험 문제를 풀고 양자는 성적에 기초하여 각자의 계약이행을 따진다.

반대로 교사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자. 국어를 가르치는 사태라면, 교사가

생각하는 또는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볼 때, 앞에 있는 학생이 배워야 할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후에 필요한 자료로 시나 소설, 글이나 그림을 택하여 가르친다. 그리고 나서 교사는 학생이 그 지식의 얼을 배웠는가 아닌가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점검을 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를 탐구한다.

이런 교사와 교육 사태는 가정하기 힘든 것인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해결 가능한 것인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가, 안 해도 되는 일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은 현재의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0개 교과목의 경직성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을 걷어 내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다양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가는 학업 성취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수업에 적합한 교재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구성하고,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교사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해도 허망한 꿈이요 비현실적인 바람들이다. 그동안 많은 처방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무언가 잘 안 되는 것은 무언

가 빠진 것이 있음을 반증한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핵심을 찾아서 해결의 열쇠를 구워 내야 한다.

교과서에 달한 한국의 교육과정은 혹시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간의 역할 혼미 때문은 아닐까? 도대체 그동안 애기되어 온 교육과정의 대강화는 무엇이며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무엇일까? 과연 학교 교육과정은 자율화될 수 있으며, 도대체 그동안 자율화를 막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3. 국가 교육과정 대강화의 의미를 찾아

교육과정의 대강화는 현행 편제 및 이수 시간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국가 교육과정을 최소화하고 필수 교과를 제외한 교과의 선택을 학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수차례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있어 왔지만 그것들은 모두 기존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편제와 시간 배당을 바꾸고, 그에 따라 과목별 시수 배당을 하는 일들에 불과했다. 또, 총론과 각론의 논의가 일관되지 못하고 따로 이루어져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이 각론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져야 할 내용 지침이 아니라 행정적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과 같은 규제와 형식에 치중하여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을 등한시해 왔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아닌 그릇에 불과한 교과서를 전달해 온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잘 가르쳐졌는지에 대한 책임을 학생의 교육성과가 아닌 교과서의 진도를 다 마쳤는가로 판단해 왔다. 교육과정이 형식적인 측면으로 지나치게 자세히 규제되어 있기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자율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역설적으로 문서상으로 이미 완벽한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수준에서의 ‘배우는 교육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잘 짜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천 가지 학교, 만 가지 학생이 하나의 짜여진 틀 안에 담겨질 수는 없다. 잘 만들면 잘 가르쳐 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과정의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과로 단위 학교에서는 자율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진 셈이다.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쳐야 할 여러 교과가 학교급별로 세분화되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목별로 최소 수업 시수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교육과정 고시는 가르쳐야 할 내용을 일반에게 알림과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급 기관에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 고시의 역할을 돌이켜 보았을 때 교육과정 고시는 법령에 기초하여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할 것을 일반에게 알리는 역할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하급 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지켜야 할 명령으로서의 역할을 더 크게 수행해 온 것이다.

교육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문제일 때 교육과정은 교육에 있어 ‘무엇’에 해당되는 중요한 일이다. 학생이 배워야 할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교육과정은 알려야 하는 단순한 문서적 지침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진 보다 포괄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인간을 길러 내는 것과 관련한 공통된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하급 기관에 내려지는 명령이 아닌 국가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로 격상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역할이 아닌 법률로 격상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독하

국가가 학습 단계별 학업성 취도를 점검하고
학교는 ‘우리 학교의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학교가 ‘우리 학교의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는 역할을 담당하고 배우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나 갈 주체가 될 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 교육과정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 교육과정의 정립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전략은 국가는 기초 학습 능력을 보장하고 학교는 기초 학습 능력에 기초하여 21세기형 한국인을 육성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지는 이원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 구조의 기초는 국가가 학습 단계별 학업성 취도를 점검하고 학교는 ‘우리 학교의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학교가 ‘우리 학교의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교사가 하는 일은 수업을 통해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전적인 권리를 갖는다. 학생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는 일,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 언제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것을 가리켜 교육과정 구성권, 교육과정 실행권(수업권), 평가권이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에게 주어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교육과정의 구성권이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는 교사에게 교과용 도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이다.

“교과서=교육과정”이라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 사용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규제는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성을 야기한다. 또, 교과서의 의무적 사용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한다. 현재의 견고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학생의 수준에 알맞은 수업을 구안하고 운영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된다. 교사에게 교육 내용의 선정권이 있다면 교과서 선택의 주체 역시 원칙적으로 교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의 국정제는 포기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검 인정제 역시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사가 교육내용에 알맞은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이 글은 천세영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탁 과제로 수행한 다음 연구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부 관련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천세영 외(2009), 교육과정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과 교과서의 변화 전망

글 |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우리 교육의 약점을 꼬집고 있다. 15세 학생의 국제 학력 비교 연구(PISA 2006)에 따르면 투입 시간 대비하여 우리 학생들의 성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도 참여 국가 중 바닥이다. 핀란드가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이 교육 성취를 내는데 반해 우리는 무조건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해서 그만한 성적을 내는 것이다. 또, 미래의 새싹들이 만성적인 사교육과 수동적인 공부로 시들어 가고 있다. 머리 공부, 시험 공부에는 앞서나 실제적 체험 공부에는 약하다. 심지어 학교 정규 수업보다 방과 후 학교나 사교육이 더 중요한 교육 정책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개인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 학생들의 공부에 전환점이 절실하다. 교육과정은 이를 구현한 교과서를 통해 학생 교사와 만나게 된다.

이 글은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교육과정특별분과의 연구팀에서 마련한 2009 교육과정 개정안의 대강을 편의상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연동하여 교과서의 개편 과제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2009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의 대강

학교 공부의 밑바탕에는 교육과정이 있다. 교육과정을 개선하면 수업과 시험이 개선된다. 교과부에서는 교육의 풍경을 바꾸게 될 교육과정 청사진을 2009년 하반기에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미 2006년과 2007년에 국가 교육과정 포럼이 진행되었고, 2009년에는 교육과정 선진화 연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2009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 총론 개정은 이미 고시된 교과별 교육과정과 개발된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학교와 교실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작게는 이미 개발된 교과서 중 교사들이 현장에서 개인적 또는 교과별로 집단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할 것이 있다. 이번 총론 개정 고시 후에는 각종 개발이나 교과서 개편, 교원 연수 후 연차별 적용이라는 수순을 밟지 않는다. 또,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서는 이전처럼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준비된 학교들부터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내용은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권뿐만 아니라 편성권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총론 개정

시마다 소모적 논란을 빚었던 교과별 시간 단위 배당의 최종 결정(배당 시수의 20% 가감)은 학교에서 교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학년군과 교과군 도입,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재구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9학년까지 하한 조정, 초등 저학년 통합 교과 재편, 초등 1, 2학년의 정규 수업 시수 확대의 점진적 적용, 중학교의 도덕, 기술, 가정, 미술, 음악 등 소배당 교과목의 분기 및 학기 집중 이수, 고교 1학년에 적용해 오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재편, 고교 졸업 이수 단위 축소, 일반고의 보통 과목과 특목고의 전문 과목의 통합 정비, 일반고에 문 이과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 과정도 저점 학교를 통해 지정 운영하여 이 분야 적성과 진로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등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10개에서 7개로 통합하여 재분류하는 교과군과 2~3개 학년을 하나로 간주하는 학년군 도입은 중요하다. 교과군과 학년군을 활용하면 초등의 담임 연임제, 중학교의 집중 이수와 함께 고교에서는 무학년제식 운영도 가능해진다. 또, 특별 활동과 재량 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비중을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 복수 자격 교원의 확충, 교육 성과 및 질 관리, 대수능과 고입 연합 고사 시험 과목의 축소 개선 등 새로 준비되는 교육과정 총론에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안에 따른 교과서의 변화

크게 볼 때 학년군이나 교과군 개념의 도입은 교과서 개편을 초래한다. 특히, 초등학교 통합 교과에서 과학과 체육이 별도로 분리되고, 사회와 도덕, 음악과 미술을 합해야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학 교과서

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체육 교과서는 초등학교용 다학년용, 비치용, 대여용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과 학습에 절실하지 않는 교과서 개발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교실 수업을 하라고 체육을 독립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초등 학생의 특징을 고려할 때 1교과 다책주의는 주의를 요한다. 국어의 경우 저학년에서 3책, 고학년에서 2책으로 분책하여 개발되지만 사용상의 불편이 적지 않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강조하되, 이를 재편집하여 특정 시점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부하는 교과서는 1책이 되도록 간지를 넣어 만들되, 분기별로 1책씩 분책하면 무게도 가벼워질 것이고 사용에도 편리할 것이다.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하위 분야에 대한 표시는 간지를 해 주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국어 책의 분책 방식에 관해서 교과부에서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는 89.9%로 찬성률이 압도적이다.

만약, 초등 저학년의 정규 수업이 오후 3시까지 늘어나면 이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초보적인 영어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듣고 볼 수 있도록 오디오, 비디오 교재들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것을 인정으로 개발할 경우 교육청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예컨대, 전통 동화 애니메이션을 인정 교재로 제작할 경우 ‘콩쥐팍쥐’는 경상북도에서 ‘선녀와 나무꾼’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개발하여 전국으로 보급함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초등학교의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서는 1~2책으로 다학년용, 학교 비치용, 대여용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를 대여해 사용하거나 일부 악보를 내려받기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3.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안에 따른 교과서의 변화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업 시간 운영 관행에 따르면 중학생은 매학년 매학기에 모두 비슷한 과목을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이 바뀔에 따라

교과서의 사용도도 달라질 것이다.

방과 후 학교가 변창하여 이에 소용되는 교재도 비중이 커질 것이며,

원격 학습 형태가 늘어나면

이런 학습에서 교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12~15과목씩 가르치고 배운다. 주당 1~2시간 과목이 절반이나 된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은 수업, 학습, 과제, 시험 부담이 많다. 이를 고치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 개선안은 중학교에서 다교과 분산 피상 학습을 넘어 소교과 집중 심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이수'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교과목을 매학년 매학기에 개설하기보다 학기당 8과목 정도를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미술'을 주당 1~2시간씩 매학년 매학기에 수업하라는 현행 규정이 아니라, 6개 학기의 수업 시간을 학기별로 모아서 2개 학기에 걸쳐 주당 4시간씩 가르치도록 하면, 미술을 보다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 수업다운 수업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학생들의 학습, 과제, 시험 부담은 줄어들고, 교육 효과는 높아지게 된다. 즉, 현재 교과목을 없애거나 그 배당된 수업 시간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교실 풍경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수업을 훨씬 알차게 할 수 있어 학습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중학교에서 3개년을 하나의 학습 기간으로 간주하는 학년군 개념이 도입되면, 집중 이수의 대상이 된 도덕, 음악, 미술, 기술, 가정 등의 교과서는 1, 2학기 구분은 있지만 학년 구분은 없게 만들어져야 한다. 또, 내구 연한이 1년 미만인 저가의 학생 개인 소지용, 소비용 교과서와 내구 연한이 상당히 긴 고가의 학교 비치용, 학생 대여용 교과서의 구분도 필요하다. 후자는 학습과 수업에 교과서가 덜 쓰이는 교과에 알맞다. 특히, 미술 교과서는 화첩 등으로 잘 만들어 보급함이 더 효과적

이다. 어떤 미술책은 한국화와 동양화를 주로 소개하고, 어떤 교과서는 서양화와 현대 미술을 소개하고, 또 다른 출판사의 미술책은 건축 디자인 분야를 소개하는 것도 특색 있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이런 특색 있는 교과서가 종류별로 학교에 보급되면 학생들에게 많은 심미적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중학교에서 집중 이수를 실시하면 분기용, 학기용으로 특정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제작되는 것도 필요하다. 영국식 테마 북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특히, 과학 분야, 사회 분야가 그럴 것이다. 기술과 가정 책도 어설프게 통합하는 것보다 분책이 학습과 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수학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수학과 관련된 참고서들은 오래 전부터 이런 분책을 해왔다. 이는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재도 마찬가지다. 한 책에 두껍게 통합하기보다 수준별로 분책하여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 보급하는 것이 교육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고, 학교에서는 실제로 더 필요하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안에 따른 교과서의 변화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고교이다. 이에 따라 더 적게 쓰이는 교과서, 더 많이 쓰이게 될 교과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먼저, 국민 공통 기본 교과과는 교과별 최소 필수 단위를 지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재편될 것이다. 모든 고교생들이 구입 사용하던 1학년의 국민 공

통 기본 교과와 교과서는 100%의 학생이 아니라 70~80%의 학생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전문고 등에서는 수준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과별 최소 필수 단위 수가 총 200단위 중 적어도 120~140단위 정도가 될 것이므로,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를 가진 교과서일지라도 이만큼은 필수적으로 공부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그만큼의 교과서 수요는 안정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고교에서 수학에 15단위를 최소 필수 단위로 지정하면, 그리고 대입시가 모집 단위별로 꼭 필요한 선수 학습을 중심으로 타당하게 개선되면, 다양한 보습 교과서가 필요해진다. 가령, 예술 체육 인문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여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므로 대입 전형에서 중학교 3학년 수준까지의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오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것이다. 고교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못다한 수학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이런 교과서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소용되는 교과서는 다양한 수준과 영역의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 60년간 국 영 수 중심, 문이과 중심으로 획일화된 고교 교육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하여, 문 이과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 과정의 학습도 지역별 거점 학교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육청에서 대규모 학교에 문 이과 +1 과정을 개설하면 학생은 소질과 적성을 쫓아 미술 디자인, 문예 창작, 연극 영화, 음악 공연 예술, 체육 등의 교육이 특목고를 가지 않고도 가능해진다.

학교 내에서 학습 기회를 가지게 되어 그만큼 사교육에 기대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이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목고 교과서들을 이 분야 지망 일반고 학생들도 쓰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목고의 전문 교과용 교과서를 자사고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고의 문과의 우수한 학생들은 외고 학생들과 비슷한, 이과의 우수 학생들은 과고 학생들과 비슷한 학습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과목의 교과서의 수요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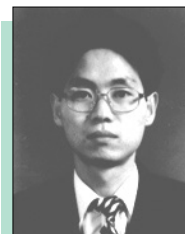
5. 맺음말

교과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학생 소지용 교과서, 학교 비치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정보다 검정, 검정보다 인정 교과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학생 개인용 교과서나 보조 교재는 소모품으로 저렴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학교 비치용 교재는 내구용으로 잘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이 바뀔에 따라 교과서의 사용도도 달라질 것이다. 방과 후 학교가 번창하여 이에 소용되는 교재도 비중이 커질 것이며, 원격 학습 형태가 늘어나면 이런 학습에서 교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을 대체하려고 하지만 사용 환경, 플랫폼 설치와 소프트웨어(SW)의 급속한 발전으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더구나 검정 교과서의 공동 생산이 개별 생산으로 바뀔에 따라, 국정은 줄어들고 검 인정은 늘어남에 따라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교과서 공급망의 일원화도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교과서 대여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글 | 김상재
경기 판곡중학교 교감



1. 서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교육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교과서 대여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율 학교 운영, 교과 전용 교실제 및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장 적응성이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구미 선진국의 교과서처럼 참고서가 필요 없도록 풍부한 내용을 담고 외형 체제도 개선된 선진형 교과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 및 외형 체제가 개선되면 그에 따라 교과서의 가격이 상승하여 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교과서 대여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교과서에 대한 소유 개념이 강하고 교과목의 핵심 내용을 압축 정선하여 집필된 교과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교과서 대여제의 개념,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바람직한 해결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교과서 소유제와 대여제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어 학생들이 교과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과서 소유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대여제’는 교과서의 소유권은 학교가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일정 기간 교과서를 대여하여 사용한 후 반납하는 제도이다.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하는 구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교과서 대여제는 교과서 집필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집필 방식은 교과목의 핵심 내용을 압축 정선하여 교과서에 담는 방식으로 교과서의 양은 200~300쪽 정도이므로 값이 저렴하고 소모품으로 여겨진다. 반면,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교과서는 참고서 내용까지 포함한 풍부한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 판형도 크고 600~700쪽에 이르는 방대한 교과서로, 그 값이 매우 비싸다.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싼 교과서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기에는 많은 재정 부담이 되므로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과서 소유제에서의 교과서는 압축 정선된 교과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학습 요점을 파악하기 쉬우며, 학생들이 보관 운반하기 용이하고,

교과서 대여제에서의 교과서는

내용이 풍부하므로 별도의 참고서가 없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이 보관 운반하기 어려우며, 반납을 해야 하므로

마음대로 메모하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학생들이 마음대로 메모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과서만으로 스스로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해설하여 전달해 주는 교사와 참고서 등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교과서 대여제에서의 교과서는 내용이 풍부하므로 별도의 참고서가 없이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이 보관 운반하기 어려우며, 반납을 해야 하므로 마음대로 메모하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 소유제가 교과서 대여제보다 더 경제적인지는 의문이다. 우리 교과서는 그 자체의 값은 싸다 할지라도 참고서 등의 구입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미국의 사례

가장 대표적으로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교과서의 표지 뒷면에 연도별 사용자 기록표를 부착해 놓고 사용자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액을 변상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교과서를 교체하기 위하여 매년 20% 정도의 새 교과서를 구입한다. 그리고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1인당 두 권씩의 교과서를 준비하여 한 권은 교실에 보관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 권은 학생에게 대여하여 가정 학습용으로 활용하게

한다. 교과서 부피가 두꺼워 학생들이 들고 다니기 어려운 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수 학습 방법 면에 있어서는 교과서에 마음대로 메모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별도로 제작한 다양한 워크시트를 활용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사용한 워크시트를 별도의 개인 폴더에 보관하여 활용한다.

4.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향

교과서 소유제를 교과서 대여제로 전환할 경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해본다.

먼저, 수업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변화된 교과서 체제에 적응하는 문제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보충 심화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목에서 성취 기준에 심화 과정을 도입하였고 교과서에서도 심화 내용을 삽입하여 학생의 수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하게 하였으나, 교과서의 내용은 모두 학습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교과서관 때문에 결국 학습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내용이 풍부해지면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압축 정선된 교과서와는 다른 교과서관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가질 수 있도록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수업 내용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가르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재구성

교과서 대여제를 추진하는 기본 목적은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과서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장 적응성 및 질 높은 교과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하고 핵심 요소를 추출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교과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교과서를 참고서로 삼아 교사의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내용이 풍부해져 교과서 무게가 늘었을 경우 학생들이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기별(학년별) 교과 집중 이수제, 수업 시간 블록 타임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하루에 수강하는 교과목 수를 줄이거나, 미국의 일부 지역의 사례처럼 한 학생당 두 권씩의 교과서를 배부하여 한 권은 교실에 보관하고, 다른 한 권은 가정에 보관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과서 운반의 어려움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반복적 대여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메모 등 표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풀이, 반복 연습, 실험 및 관찰 기록 등에 필요한 연습용 자료를 별도로 보급하거나, 미국의 사례처럼 수업 시간에 교사가 별도로 제작한 워크시트를 학생들이 개인 폴더에 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의 교과서 비용 부담 증가 문제이다. 무상 교육 대상인 초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 교육청의 교과서 공급 비용은 1,700억 원 규모인데, 교과서 내용 증가 및 외형 체제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는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일부 지역과 같이 학생들의 운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두 권씩의 교과서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대여제가 추진될 경우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가격 상승분까지 합하여 4배 이상의 재정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대여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분실 또는 훼손된 교과서의 교체 비용만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인 것이다.

다섯째,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서 대여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전체 교과서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대여하고 학부모로부터 일정한 대여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초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게 되나, 4~5년이 지나면 학교의 교과서 구입 비용이 학부모의 대여료로 충당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이다.

여섯째, 교과서 대여제 실시 시기의 문제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며, 적용 시기에 맞추어 교과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대개 교육과정은 5~6년 주기로 개

정이 이루어지고, 교과서는 발행은 교육과정 고시 후 3~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면적인 교과서 대여제의 실시는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교과서 대여제의 실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도 새로운 교과서 개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나 전면 개정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교과서 대여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교과서 대여제가 실시되면 교과서의 수정 보완이 어렵게 된다. 현재 우리는 사회 환경의 변화 및 지식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매년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교과서 대여제에서는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교과서 자체에 대한 수정 보완이 어려우므로 수정 보완이 자주 이루어지는 사회 교과 같은 경우 필요시 수정 보완 자료집을 별책으로 보급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출판 시장이 교과서 대여제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발행 자체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교과서에 부수된 참고서에서 얻는 수익을 기대하고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교과서에 참고서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출판사는 참고서에서 얻는 부수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현행의 경우에도 주요 교과목 이 외에는 출판사들의 교과서 출판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교과서 대여제가 실시되면 일부 교과는 교과서 출판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출판사는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교과서 출판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교과서 다양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유수의 대형 출판사들만이 교과서 출판에 참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대여제 시행 시 출판사가 교과서 출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일정한

수익성 보장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교과서는 일선 교수 학습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학교 자율화의 확대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교수 학습 방법도 다양해질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교과서도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교과서 집필 방식에서 전면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와 풍부한 내용을 담도록 변화될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이 풍부해지면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교실 수업은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교과서의 기능도 바뀌게 될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를 추진하는 기본 목적은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과서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장 적응성 및 질 높은 교과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소유 개념을 일시에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교과서 대여제는 그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시사점 및 학교 현장의 변화 사례



글 | 이명섭
강원 인제 신남중 고등학교 교감

1. 들어가며

지난 해 10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난 2월 16일 전격 공개되었다. 결과는 고등학교는 16개 시·도 교육청에 초·중학교는 전국의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보통 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학생으로 나눠 학업 성취도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발표되었다.

발표 후, 각급 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물론 지역 교육청에서는 일단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사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던 지역 간, 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엄존한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느라 분주하기도 하였다.

수도권의 모 교육청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당연히 학력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다가 적지 않게 당황하기도 하였고, 모 교육청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또, 지방의 모 교육청에서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각급학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교과부에 특별 교부금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근무하는 신남중학교 역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기로 전국 하위 10%에 포함된다.는 오명과 함께 지역 관내 6개 중학교 중 꼴찌라

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역시 적잖게 충격 받은 본교에서도 교육의 책무성을 통감하며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운영에 응모하여 2009년 3월부터 지정되어 ‘비교 우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력 향상 도약의 해’ 마련을 위하여 전 교직원이 학교 교육과정 편제의 문제점과 교수·학습 방법을 되돌아보는 등 주위의 눈총을 받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본교에서는 외국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시사점과 우리나라 학업 성취도 평가 고찰을 통하여 최근 학업 성취도 평가의 자료 공개와 전집 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내지는 개선 방안 논의와 함께 필자 소속 학교의 변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학업 성취도 평가 개관 및 평가의 당위성

2008년 10월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6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과목으로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5,000여명(2.4%), 중학교 3학년 학생 69,000여명(10.4%), 고등학교 1학

오늘날 우리 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한 차원의 높은 교육 서비스와 교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초 학력 미달’이라는 성적표로는

창의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고취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년 학생 44,000여명(9%)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7개 학년으로 확대 추산하면 약 30만 명 정도의 학생이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결과로 치부된 셈이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한 차원의 높은 교육 서비스와 교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초 학력 미달’이라는 성적표로는 창의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고취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세계의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의 성과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성과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등의 고찰과 교육 체제의 효율성 및 성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은 물론 단위 학교의 학교장을 포함한 전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평가 시행 대상 역시 전집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본다.

3.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비교를 통한 시사점

【표 1】 우리나라의 각종 학업 성취도 평가 개요

구 분	전집/표집	평가 주기	평가 시기	대상 학년	평가 과목	목 적
초등학교 3학년 국가 수준 기초 학력 진단 평가	표집	1년	10월	초3	읽기, 쓰기, 기초 수학	○ 기초 학력 수준 진단 및 보정 교육을 통한 기초 학력 보장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표집	1년	10월	초6, 중3, 고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교육 목표 도달 정도 및 변화 추이 파악
교과 학습 진단 평가	시도 교육청 자율	1년	3월	초4, 5, 6 중1, 2, 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교과 학습 성취 수준 파악 ○ 부진 학생 선별 및 보정 등 기초 학력 책임 지도 추진 지원
전국 연합 학력 평가	학교 자율	연 4회		고1, 2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 대수능 적응력 신장
		연 6~7회		고3		

외국의 경우, 교수 학습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교육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지필 검사이고,
5개의 주지 교과만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수행 평가 문항이라는 명칭 하에 일부 단답형이 출제되고 있으나
고차원적인 사고력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표 2】 외국의 주요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개요

구 분		전집/표집	평가 주기	평가 시기	대상 학년	대상 과목
미국의 NAEP	long-term trend	규모가 작음.	매 4년	나이에 따라 다름.	9, 13, 17세	○ 읽기, 수학
	main	약 0.4%	2~4년	1~3월	4, 8, 12학년	○ 읽기, 수학, 과학, 쓰기, 역사, 공민, 지리, 예술
일본의 전국 학력 학습 상황 조사		전집	1년	4월	6학년	○ 국어, 산수
					9학년	○ 국어, 수학
영국의 NCA		전집	1년	1월 이후 학교별 자율 실시	7세(Key Stage 1)	○ 국어, 수학
					11세(Key Stage 2)	○ 국어, 수학, 과학
					14세(Key Stage 3)	○ 국어, 수학, 과학
호주	LANNA	전집	1년	10월 말	3, 5, 7, 9학년	○ 문해력, 수리력
	NAP	표집(약 6%)	3년		6학년	○ 과학
					6, 10학년	○ 시민 윤리
					6, 10학년	○ ICT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요 학업 성취도 평가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경우, 교수 학습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교육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미국 NAEP의 경우는 극히 소수의 인원만 평가하기는 하지만 예술, 음악, 공민 등과 같은 영역도 수행 평가 등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 방법도 선택형과 병행하여 단답형 서술형 수행형 문항을 골고루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영국 NCA의 경우 지필식 평가뿐만 아니라 교사 평가를 병행함

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평가는 지필 평가 특히 선택형이나 단답형 문항 위주의 평가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지필 검사이고, 5개의 주지 교과만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수행 평가 문항이라는 명칭 하에 일부 단답형이 출제되고 있으나 고차원적인 사고력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또, 일본의 전국 학력 학습 상황 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선택형 문항뿐만 아니라 간단한 답을 쓰도록 한 단답형 문항도 있고, 문장을 서술하도록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독자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보고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팀에는
평가 도구 개발, 인쇄, 배송, 회수 등을 모두 담당하는 대신
외부 업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문항도 있는 바, 조합형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내용 관련 지식보다는 문항 풀이 기술 훈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합형 문항을 지양하고, 문항 유형을 보다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문제도 포함시켜 교육과정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집으로의 확대에 대비하여 단위 학교에서 주지 교과 중심의 지식 위주 시험 문제 풀이 수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서의 전환을 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대상 과목의 축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전집 검사의 경우, 외국의 성취도 평가는 대부분 국어, 수학, 과학을 평가 대상 과목으로 하고 있다. 표집 검사인 경우, 교육 현장에서 평가 방법을 선도하거나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피드백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집 검사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제한된 교과만 평가하고 있다. 호주의 전집 검사인 LANNA의 경우 문해력(읽기, 쓰기, 철자)과 수리력을, 영국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을, 일본의 경우 국어와 수학을 평가 과목으로 하고 있다.

셋째,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이다. 미국 NAEP의 경우 평가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시

하고 있다.

전문가를 위한 기술 보고서뿐 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한 요약 보고서, 교사나 학교에서 교수 학습에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된 수업용 보고서,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보고서, 추이 보고서 등 활용 목적이나 필요, 또는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웹에 탑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독자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보고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NAEP은 평가 결과의 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엄격한 제한 하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원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ETS와 연계하여 연구 방법이나 심리 측정학의 방법론에 대한 상담 및 조언도 하고 있다. 또한 NAEP에서 하는 것과 같이 직원을 각 지역이나 학교 등에 파견하여 평가 결과와 의미, 활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도 평가 결과의 활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넷째, 평가 문항 출제, 채점, 시행 기능의 역할 분담과 함께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일본의 문항 개발 담당 연구원들은 평가 문항 개발에 주력하고, 인쇄, 배송, 회수 등의 행정적인 절차는 외부에서 하거나 교육부에서 담당하며, 채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팀에서 평가 도구 개발, 인쇄, 배송, 회수 등을 모두 담당하는 대신 외부 업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4. 신남중학교의 변화 사례

참고로, 필자는 지난 9년 6개월 동안 교육 전문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부터 병설 학교인 신남중 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필자는 교과부에서 지난 2월에 발표한 ‘2008년 9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인지하고 본교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본교 전직원은 꼴찌라는 별명(?)으로부터 벗어나, 명실상부한 ‘학력 도약의 해’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감히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학교 여건 및 변화를 위한 자구 노력 내용을 소개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1. 학교 여건으로 본교는 인구 약 4천 명을 밑도는 면 지역으로, 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적 혜택이 전무하여 사고 영역이 좁고, 특히 44번 국도의 우회 신설로 경제가 침체되어 생활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편으로,

2. 학교에서는 ‘기존, 무특성의 평범성을 벗어나 액센트가 있는 학교’로 변화 유도를 위하여 2009학년도를 ‘비교 우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력 향상 도약의 해’를 마련하였다.

3.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가.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방과 후 교과 프로그램과 방학 중 교과 프로그램을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하고,

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

한 소질 계발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 입학생 이탈 방지와 공교육에 대한 교육 공동체로서의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학교 내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직원 공동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라. 학생들의 정서 순화 활동은 물론, 교육적 문화적 복지 수혜 외, 야간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석식 급식 및 하교 차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 또, 학년별 학습 위계가 비교적 높은 수학 영어 교과는 맞춤형 수준별 이동 수업과 정기 고사 시, 수준별 평가제(정기 고사 평가 문항의 일부를 수준별 세트 문항으로 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등의 대폭 확대 운영으로 정규 교육과정 대비 160%의 수업 시수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4. 기대 효과

가. 충분한 학습량 확보로 전체적인 학력 향상은 물론, 계획적인 교실 수업 개선으로 학습 결손의 문제 해결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에 일조한다.

나. 방과 후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구제는 물론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다.

다. 다양한 소질 계발 프로그램 개발 적용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연**



일본인 유학생이 경험한 핀란드의 교육

글 지쓰까와 마유 (유학생, 핀란드 공부법 저자)

요즘 핀란드 교육의 우수성이 밝혀지면서 핀란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저널 『교과서연구』는 매년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 교과서에 관한 내용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57호에서는 최근 ‘핀란드 공부법’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한국에서 제2의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지쓰까와 마유 씨를 통해 핀란드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핀란드로 유학을 떠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동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보다 7살 위인 언니가 칠레에서 유학을 했던 것이었어요. 유학을 가기 전에 언니는 사춘기여서 가족과는 전혀 말을 안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 인사 정도는 해야지!!”라며 야단을 치는 부모님 옆에서 멀쑥하게 아침을 먹던 장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언니의 “무서운 존재”라는 이미지는 계속 나를 지배했었고, 그런 언니와 일 대 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칠레로 유학을 떠나 일 년 후에 귀국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마주한 언니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멋대로

자란 긴 머리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미소는 충격이었습니다. 칠레에서 돌아온 언니는 정말이지 칠레 사람처럼 웃고, 부모님과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밝은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부터 ‘유학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학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2년 후, 그냥 바라보던 텔레비전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의 핀란드에서 일본인 여성 텔런트가 10만 엔으로 1 개월을 살아간다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소개된 핀란드 사람들은 친절하고, 소박하고, 왠지 어딘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언니의 유학과 핀란드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유학을 떠난다면 핀란드!” 하고 호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일 학년이 된 저는 언니의 유학을 주선한 AFS(American Field Service)의 시험에 응시해, 저의 소망이던 핀란드에서 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교육 제도의 커다란 차이는 ‘시험 제도’에 있습니다. 일본은 공립 학교 이외에 사립, 도립(都立) 등의 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는 서로 다른 전형 방법을 통해서 입학합니다.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고, 그 후의 진학에는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립 명문인 게이오 대학 등은 유치원 입학 시험에 응시해 ‘게이오 유치원’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게이오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게이오와 같은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를 키려고 합니다. 유치원 입시부터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대학 입시에서 모든 경쟁이 폭발하게 됩니다.

한국의 고등학교에 흔히 있다고 하는(이렇게 말해도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학생 간의 경쟁은 일본에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공개해서 노골적으로 비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발표하는 선생님은 있었습니만 . 그러나 “남들과 비교 경쟁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은 일본에서도 익숙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 핀란드에서 교육받은 헤르토니에미 고등학교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헤르토니에미 고등학교는 헬싱키 시내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된 공립 학교로 전교생이 약 640명으로 중학생이 370명, 고등학생이 270, 선생님은 약 55명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된 학교이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큰 편입니다. 위치는 헬싱키 시내 중심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핀란드 학교에도 반이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반 단위로 모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이란 학생들을 구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 단위라고 할 수 있지요. 중학교는 A반부터 E 또는 F반까지 있고, 한 반의 정원은 15명에서 30명으로 학생 수가 적은 편입니다. 고등학교는 A, B, C 세 반으로 편성되어, 학생 수는 25명에서 30명으로 중학교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받았던 인상은 학교 디자인이 아주 예뻐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이 예쁘게 유리 케이스 안에 놓여져 있는 등 학교 전체가 미술관처럼 깨끗하고 안락한 느낌이었습니다.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에 미술과 음악 수업용 교실이 있고 지하에는 체육관, 헬스장, 요리 교실, 학생의 휴게실 등이 있지요.

일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청소를 해도 교실 안은 먼지가 가득했는데, 핀란드 학생들은 청소를 하지 않는테도 깨끗합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의 수혜자여야 한다는 철저한 권리 의식은 이런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일본과 한국, 핀란드의 수업 방식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핀란드 고등학교는 일본 대학교와 비슷합니다. 우선 학기가 시작되면 수강 신청을 한다는 점, 선생님이 학생이 있는 교실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실을 찾아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많게는 30명 전후, 적으면 10명 정도예요. 수업은 선생님이 앞에 앉아 OHP(overhead projector)에다가 글을 쓰면서 수업을 해요.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회도 많아요. 한국 대학교에서도 한 학기의 전반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후반은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는 경우가 많지요?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발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 핀란드에서 단 1년간 공부를 하고 온 마유 씨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일본인 친구들이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핀란드의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소개해 주십시오.

자기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친구들에게 잡담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 청중이 있는 상황에

서 발표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저는 예전에도 친구들과의 대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대중에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스피치는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핀란드 사람은 원래 성격상 부끄럼이 많아서인지, 말로 자기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수업 중에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것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변도 해야 하고 . 친구들 앞에서 꼭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된 것처럼 수업을 해요.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시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발표하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고 듣는 사람은 열심히 듣죠.

□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학생마다 다르고, 그 과제 해결 결과를 각자 발표하는 수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수업이 가능합니까? 그러한 수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수업 방식을 일본이나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수업 방식은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학생 한 명이 아니라 학생을 몇 개의 팀으로 나눠서 한 주제에 대해 발표시키는 수업 방식이지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핀란드와 동일한 방식을 도입하면, 개개인의 지식 부족이나 학생의 의욕의 차이 때문에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격차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의 발표가 직접 성적에 반영되기 어려워요. 수업 방식이란 사회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일본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까? 핀란드에서는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제가 다녔던 일본 학교에서는 주로 교과서밖에 쓰지 않았어요. 시험 기간 전에 끝내야 하는 진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 페이지까지 끝내려

고 필사적으로 진도를 나가지요. 가끔 시간이 빠듯한 경우는 학생들의 이해 여부와 상관 없이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해도 못하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학생들의 잘못이라는 논리는 도리에 맞지 않죠.

반면, 핀란드의 선생님들은 교과서 말고 부교재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신문 기사나 칼럼을 통해서 실천적인 실력을 익히는 수업을 하고, 교과서는 그 도입 과정으로서 읽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같이 교과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숙제로 읽어오는 정도고, 부교재나 영상물을 보는 것이 주된 수업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인상깊게 수업을 한 에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핀란드의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은 갖고 있는 지식을 out put하는 능력 즉, 발표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책을 독해하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주제에 대해 마치 자기가 전문가가 됐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하니까 에베 선생님도 그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매일 엄청난 책을 읽는 것이 에베 선생님의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에베 선생님 역시 독특한 선생님이고, 핀란드 선생님 중에도 교과서에 충실하게 진도를 나가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 일본 교과서와 핀란드 교과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본과 한국에서는 학기 또는 학년이 시작되면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배부 또는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핀란드에서는 대부분 학생이 스스로 교과서를 사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큰 서점에 가면 (핀란드에는 작은 서점은 거의 없지만) 교과서 코너가 꼭 있습니다.

□ 핀란드에는 교과서 혹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까?
죄송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핀란드는 잘하는 학생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알 때까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수업의 진도가 늦어지거나 불평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없습니까?

핀란드인의 기본적인 인식 속에는 “모르면서도 진급하는 것이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있어서 선생님은 이해 못하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한 낙제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지요.

핀란드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500여만 명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일본이나 한국에서처럼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을 포함해서 평균을 끌어 올리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핀란드에서는 교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핀란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을 뽑는 등 인사권자의 역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장이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대요.

□ 인구가 일본에 비해 아주 적은 핀란드의 교육을 일본이나 한국에 적용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회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 비싼 세금을 내니까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커다란 반발이 생기겠지요.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여유로운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2, 3년 쉬면서 앞으로 뭘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대학 입시에서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여겨지는 한국에서 이런 여유로운 사고를 인정할까요?


세 번째는 한국이나 일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생 한명 한명에 신경을 쓰는 교육보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의 실력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문제로 자연히 단체 생활이 많아지고 원치 않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는 공간, 시간보다 단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핀란드 교육을 한국이나 일본에 적용하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 핀란드의 교육 방법이 좋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외의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해 주십시오.

핀란드에서 크게 느꼈던 것은 역시 ‘복지 국가’란 사실입니다. 일하는 것과 교육을 받는 것이 평등한 권리라고 보는 관점이 아주 강합니다. 사회적으로 교육 제도와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부모님이 선생님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선생님을 하나의 장인으로,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몬스터 페런츠(monster parents)라고 하여 자기 자식에 대한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제기하는 부모님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학교를 못 믿고 선생님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환경이 불쌍해요. 

제언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란

글 강진아 (주식회사 노스 이사)

현재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문제점들을 논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 전문가들과 기관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근거 하에 디지털 교과서가 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로서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해석이 이미 정의가 내려진 바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 교과서를 보조 방법으로 볼 것인지, 대체의 방법으로 볼 것인지 등의 방향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는 서책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는 보조의 의미가 아닌,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시범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환경의 교수 학습 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향후 디지털 교과서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교과에서는 마치 서책형 교과서보다는 디지털 교과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비추어 봤을 때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과목도 있었다.

디지털 교과서 자체의 내용보다는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로 내용을 한정하여 향후에 정책 수립 및 학자들의 연구에 반영이 되도록 현장 기반 개발의 경험으로 내용을 기술하겠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고 있는 다양한 이론에

맞게 조금씩 기능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진들의 의견이 아닌 개발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므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책형 교과서 VS. 디지털 교과서

서책형 교과서의 집필 및 개발 방향은 아무래도 종이로 만드는 교과서라는 물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이 되었을 것이다.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전자 저작물도 함께 개발되어 있으며, 서책형 교과서 자체에도 인터넷 활용 및 URL을 제시하여 온라인 학습 요소를 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서책형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되기 위해서 초기에 설계되어 개발된 첫 단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변환하는 작업이었다. 교과서의 본문 자체를 이북의 형태처럼 교과서 화면 그대로 표현하고, 글쓰기, 선긋기, 메모장, 노트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이 되었으며, 교과서 내용에 도움이 되는 학습 콘텐츠 즉, 멀티미디어 요소 자료 및 교수 학습 자료를 링크시키는 방법이었다.

디지털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세로 비율이 더 큰 서책형 교과서를 가로 비율이 더 큰 모니터 위에 올려놓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였다. 일반 칠판보다 작은 전자 칠판을 통해서 콘텐츠를 보기에는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실 수업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그 다음 학년의 개발에서는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과나 국어과는 서책형 교과서에서 보이는 한 페이지를 모니터에 맞게 가로로 재배치했으며, 지문이 특별히 많은 국어과 같은 경우는 4분할을 하나로 합쳤을 때 지문이 하나로 모두 보여지는 방법대로 개발했다. 과학과는 딸림책을 적절히 융합하여 재배치하였다. 수학 과목은 각 활동 단위별로 페이지를 구성하였고, 전체 서책형의 미니맵을 제시하여 재배치를 통한 혼선을 줄이고자 시도하였다. 각 교과별로 다양하게 시도된 형태이므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표준은 없는 상태이다.

서책형 교과서와는 다르게 디지털 교과서는 구동되는 환경이 컴퓨터이다. 따라서, 학생이 사용할 단말기의 화면이나 교실에서 사용할 전자 칠판의 화면 비율을 고려하여 재배치 전략 및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 교안 내용 자체의 개발 히스토리를 보면, 서책형 교과서의 구성을 그대로 반영한 디지털 교과서에서 재배치할 수 있는 자유형 디지털 교과서로 발전했고 지금은 수준별 영어 디지털 교과서를 창작형이라고 하여 아예 처음부터 영어 교과 내용을 개발하여 탑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서책형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종이로 인쇄되는 서책형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구성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 집필자는 교과서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 생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서책형이라는 한계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고 답도 같이 제시하는 사회 과목과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학습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보여졌으면 하는 것이 한 화면에 모두 보여질 수밖에 없는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도 있을 것이다.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수정하고 출판되어 공급되는 과정이 오래 걸려 현실에 대한 내용보다는 과거의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서책형

교과서의 전반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

수학의 딸림책인 익힘책에서는 관련 단원의 연습 문제 외에 ‘좀 더 알아보기, 잘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학습에서는 익힘책에 있는 “잘 공부했는지 알아보기”의 문제를 책 위에 풀게 하고 교과서를 걷는 경우도 있다. 교사는 걷은 학생들의 교과서에 채점을 하고 다시 돌려 준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디지털 교과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문제의 답을 바로바로 입력하여 교사에게 전송하면 교사는 정 오답 채점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통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구현의 한계와 수식 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 이슈는 있다.

또 다른 내용은, 교과서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다음 과정을 보여 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원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생각하게 하고 전개도를 보여 줘야 하는데, 서책형 교과서의 지면에서는 원기둥과 전개도를 미리 한 번에 다 보여 주게 된다. 사회과도 마찬가지이다. 찾아보고 토론하라고 하면서 밑의 지문에는 학생들이 생각해서 답을 넣기 전에 답을 알려 주고 있다.

“토론해 보자,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교과서에서 예제가 바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교과서에서 아이콘 처리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학습 내용을 먼저 숨겼다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영어과, 사회과,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켰다.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의 특성을 살려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디지털 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에 맞는 지시문도 재정비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을 보고 찾아보시오.”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 집필 의도가 정지된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간단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가 기술 기반으로 이해가 되어 기술만 강조하기보다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의견과 방향을 고려한 후 디지털 교과서의 현재와 향후 기술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야 한다.

아니라면, 지시문 자체를 “아래의 을 돌려서 관찰하고 답하시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찾아보시오.”, “맞혀 보시오.”라고 했는데, 실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드래그 해 보고, 돌려 보고, 확인해 보는 등 교과서와 콘텐츠의 지시가 통일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서의 지문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별도로 링크되는 멀티미디어에서 콘텐츠의 사용 지시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밖에 없다.

디지털 교과서에 맞는 지시문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하며, 어떤 기능들을 보편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다양하다. 사회과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만이라도 확실하게 제공된다면 디지털 교과서 환경에서의 수업은 원활할 수도 있겠다. 사회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최신 정보가 아닌 것이 문제라면,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이미 퍼블리싱 되는 사회과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의 변경이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교육 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한 번의 수정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교과서가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가 가장 빠른 경우가 될 것이다.

사회과와 같은 경우, 이미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개

발해 놓은 수많은 우수 자료들이 각 기관 부처에 관련 홈페이지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별도의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오히려 질 높은 우수한 사회과 콘텐츠로 태어날 수도 있겠다. 콘텐츠 개발사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러닝 콘텐츠나 교수 학습 자료를 또 다시 중복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와 그 환경에 맞는 최적의 콘텐츠를 구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디지털 교과서의 토론 게시판과 사회과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학습 이력 등 포트폴리오 역할을 할 지원 시스템과 콘텐츠가 어떻게 연계되어 교수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여러 환경에서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를 돕는 등 과거에는 부족했던 요소들을 시범으로 개발하여 효과성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수학과와 과학과 같은 경우는 동기유발을 하여 교과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원리를 이해하도록 조작과 탐구 영역의 콘텐츠 요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콘텐츠는 수학과 과학과라 할지라도 단순한 지문 및 그림 제시형이거나, 간단한 정 오답 체크 등이었다. 반면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면 수학과는 교과서 내용 자체에 입력 박스에서 답을 확인하게 하고 그것이 저장되어 개인 정보가 남는다면, 현실적으로 수준별 학습이 어려운 환경에서 데이터로 수준이 바로 정해지며, 그에 맞는 지도 및 학습

내용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교과서는 XML 표준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것은 위에 제시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확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문제를 풀고 바로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면, 수준을 가늠하는 문제를 풀어 다음 문제를 그에 맞게 자동으로 제시가 되게 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구현되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수 학습 환경에 따라서 동기유발과 동기 지속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흥미를 위해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함께 해 보는 네트워크형 게임이나 도전 골든벨 같은 기능으로 충분히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히 조작과 탐구 요소로 최신 기술로 멋지게 개발하여도 실제로 사용하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사용자는 콘텐츠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과 탐구의 정교한 작업들은 별도로 두고서라도 각 과목별로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하여 꼭 필요한 기능을 정의 내려야 한다. 정말 간단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가 기술 기반으로 이해가 되어 기술만 강조하기보다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의견과 방향을 고려한 후 디지털 교과서의 현재와 향후 기술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기준으로 변환하고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책형 교과서에서 쓰였던 이미지 원본 파일과 교과서 편집 파일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교과서에서 내용 자체를 확대할 경우 이미지 해상도 때문에 깨져 보이지 않으려면, 모든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현재는 서책형 교과서에 쓰인 이미지 파일을 JPG나 EPS 확장자로 받

았는데, 용량이 커서 파일 사이즈를 줄였고, 그러다 보니 확대했을 때 지저분하게 깨져 보이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만약, 이미지에 대한 원본 파일을 받는다면, 장애우용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할 때 약시자와 같은 학생들에게 맞는 아웃라인 처리를 한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화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요즘, 디지털 교과서와 콘텐츠에서도 적용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원론적인 설계 방향과 지침이 있으나, 실제로 시간이 소요되는 콘텐츠 개발에 바로 사용될 세부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아직 디지털 교과서의 최종적인 모습이나 기능 고도화에 따른 개선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답이 없다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계는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 ‘약시자용 전자 교과서’가 개발됐는데, 콘텐츠 자체의 개발도 있었으나 일단은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에 있어서 반영해야 할 요소들이 더 많았다. 현재도 콘텐츠에서의 내부 개발 설계에 앞서 먼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플랫폼 개발 방향과 지원 시스템 개발 방향과 함께 논의되어 확정이 되어야 하겠다. 그 이유는 디지털 교과서가 각 영역별로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다양하여, 개발 범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여야 각 개발 영역별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개발하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어쩌면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해결 방법보다는 문제점들을 대면하여 변화해 나갈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는지 되돌아본다. 디지털 교과서라는 미래 지향적인 중요한 사업을 정시하는 일이 없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교과서를 연구하고 적용하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 수년 내에 국가 경쟁력은 이로 인하여 높아질 것이다. **연**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 온다더니

글 윤옥희 (세광음악출판사 과장)

☞ 새 교과서 집필자와 함께한 시간들……

검정 교과서 합격 발표 소식을 하루 앞둔 4월 22일, 마치 수험생이 대학 입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듯……。 조금은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사실 편집자인 나에게는 별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건만, 이렇듯 긴장감이 드는 것은 자존심과 자긍심 때문이었으리라.

발표 당일 아침, 전깃줄에 앉아 노래하는 까치를 보고, 왠지 ‘좋은 소식이 오려나?’ 하는 기대를 갖고 출근했다.

출근하자마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렇게 빨리 가던 시간도 이럴 땐 왜 그리 시간이 더디 가는지. 정해진 시간이 되자 드디어 발표가 공개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음악과 명단을 서둘러 찾아보았다.

많은 과목과 명단 속에서 우리 출판사 이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순간 그동안 밤을 새우며 고생했던 일들이 마치 눈앞에 스크린이 펼쳐지듯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밀려오는 감동과 희열이란……。 아마 그 어떤 기쁨도, 다

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쳤다.

내가 편집자로 지나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참 감회가 새롭다.

음악이 좋아 선택했던 음악출판사.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과서 팀에 합류되어 5차 교육과정 때부터 시작해, 제6·7차,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그리고 보니 2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느새 내 머리 위에도 흰새가 하나 둘 날아 앉는 걸 보니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다.

매년 교과서 수정과 보완을 하다 보면, 5년마다 개정되는 교육과정 발표는 왜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세월도 참 빠르다. 지난 시간들이 섬광처럼 지나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다.

내가 처음 교과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라는 것에서 대단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임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한 건 아니다. 그래서인지 교과서는 다른 단행본 책과 달리 남다른 애정이 있다. 지난날 교과서 작업을 할 때마다 나는 그 작업들이 너

무 힘들어 ‘이번엔 절대로 교과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까지 해놓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교과서와 함께 2008년 가을과 초겨울을 보냈다. 마감에 임박해선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에서 꼬박 밤을 새기도 했다. 교과서 작업을 1순위로 하여, 꼭 해야 하는 일 외에는 작업하던 모든 업무를 차치하고, 허구한 날 야근을 해야 하니 모든 사적인 일까지 제쳐놓고 온 정성을 기울여 열정을 다 쏟았다.

교과서를 처음 집필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일할 때 애로점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집필자와의 만남은 좋은 기억과 인연이 될 것이다.

음악 교과서는 다른 과목과 달리 주로 악곡이 많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모든 일을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글자는 사진 식자로 인화하여 대지(臺地) 위에 편집하고, 악보는 오선을 그리고 음표 머리 하나하나 도장을 찍어 악보를 만드는 등.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원시적인 작업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내게는 참으로 기억할 만한 추억도 많다. 곡 하나하나 뿐 아니라, 음 하나하나까지 눈으로 보는 교정은 물론, 기타와 리코더까지 멜로디 악기를 동원해 쳐 보기도 하고 불어도 보고, 글자를 잘못 붙여 엉뚱한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 출판 언어도 지금은 많이 순화되었지만, 그 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낯설기만 했던 일본어들. 하리꼬미, 동뎡 등등. 그리 오래 된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아득히 먼 일인 양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국정 교과서와 달리, 검정 교과서는 특히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 과제와 제출 기한이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 기준에 따른 정확한

심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어느 출판사나, 저자나, 편집자나, 모두 최고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또, 개발된 교과서가 많은 학교에 채택되어 많은 학생들이 그 교과서로 배우기를 바랄 것이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내가 만든 교과서로 누구보다 많은 학생들이 배우기를 바란다.

음악 교과서의 중요성

교과서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니만큼 그 어떤 단행본보다 중요하다.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예술과 관련된 음악은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매번 개정되는 교육 과정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 이상과 합리성이 현 교육 현장의 실정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아쉽다.

디지털 교과서의 상용화를 앞두고 시범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대는 보편화 된 인터넷과 정보의 홍수로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 실제 교육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명석 같아진 김에 한 곡조 뽑는다고, 이 지면을 빌어 실제 중·고등 음악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면서 편집자로서의 입장을 토로해 볼까 한다.

나의 지난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음악 교과서의 지식 정도는 차치하고, 그때 배운 노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요즘은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행가 등 수많은 곡을 접하고 있고, 예전엔 사립 학교나 예술 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방과 후 수업이 있어 너무나 많고 다양한 배움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많은 지식과 학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줄 알고
 아름다운 고전 음악을 감상할 줄 아는
 여유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요로운 정서라 본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음악 수업 중에 악기 하나쯤 다룰 수 있게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음악이나 미술을 배운다는 것이 특별히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요즘 예능 과목은 영어 교육과 대학 입시에 밀려 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많은 지식과 학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줄 알고 아름다운 고전 음악을 감상할 줄 아는 여유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요로운 정서라 본다. 모든 학생들이 음악이나 미술 등 예능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악기 하나 다룰 수 있고, 좋아하는 그림 한 점 그릴 줄 안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여유롭고 행복할까, 상상해 본다.

음악 교육을 미학과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중요함이 예술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예술적 심미안과 도덕적 품성, 보다 풍요로운 삶의 영위, 바람직한 가치관, 더불어 사는 지혜,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 등 인간의 다양한 지성과 감성을 일깨우고 키워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어떤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되고 서로 경쟁자가 되어 점수와 등수에 민감하고 진학에 온통 매여 있지 않은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뿐만 아니라 음악적 표현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내포하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Reimer, 1990). 물론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은 많겠지만 그런 단어들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깊은 내면세계, 그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음악이다

(Dewey, 1958).

즉, 음악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이며, 음악의 가치는 그 내면 세계들을 연결해 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음악 교육이란 바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배우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바람

나는 음악 교육가도 아니요, 교육 행정가는 더욱이 아니다. 다만, 음악을 좋아하고 다음 세대를 염려할 뿐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예인 이름보다 꽃 이름을 더 많이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어느 CF 광고처럼, 대다수 아이들이 전문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요나 힙합, 연예 정보를 우선시하기보다 고전 음악과 미술을 이해하고 가까이 하며 꺼려하지 않기를 바란다.

요즘처럼 너무나 극단적인 행동과 즉흥적인 범죄, 끔찍하고 무서운 패륜적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자신을 사랑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자신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그 바람은 모름지기 어린 시절부터 정서를 순화시키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오직 예능에서만 배울 수 있는 덕목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나는 편집자로서 감히 편집자를 ‘제2의 저자’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단지 주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쓴 원고를 검토, 보완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안하여 특징 있는 최상의 교과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저자를 돕는 것이 편집자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엔 교과서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해 놓고도 또 교과서에 매달렸고,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최상의 책이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교과서 편집에 임했으며, 그 결과 다행히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행복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 본다.

얼마 전 비둘기가 해조류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화의 상징으로 알고 있던 비둘기가 바이러스 성 전염병을 일으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다. 특정 공포증의 일환인 조류 공포증의 존재가 되어 버린 비둘기. 이제 사람들은 때 지어 나는 비둘기들을 보고 가까이하기를 기피하게 되었다.

흰 머리카락이 하나 둘 늘어 나의 검은 머리카락이 흰머리로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 존재의 이유가 바뀌어 버린 그 속에서도 오늘 아침 밝은 소리로 반기는 까치의 노랫소리가, 그래도 반갑고 출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해 준다.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과서는 정성과 끈기 그리고 자존심

글 이상민 (두산동아 차장)

☞ 2008년 3월 6일은 운명의 날

2008년 3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는 약 2년여 간 작업해 온 중학교 1 수학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당락이 발표되는 날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과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날이다. 아마도 교과서를 출원한 모든 출판사나 편집자들은 긴장한 상태로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날 우리 팀원 중 한 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 번호를 치는데 얼마나 멀리 키보드를 치면서도 저절로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치지 못하였고,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을 테지만 다른 편집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나 역시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 개발을 해 왔고 그때마다 발표날을 맞이하지만, 그 날 만큼은 떨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 번호가 입력되고, 중학교 수학 교과서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모두 합격했음을 통지받았을 때 팀원들은 모두 쾌재를 부르며 기뻐했으며, 그 기쁨이란 경험하지 않은 편집자라면 모를 것이다.

교과서 작업이라는 것은 참고서 작업과 달리 합격 또는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발표 당일엔 합격한 회사 혹은 팀은 잔칫집 분위기이고, 불합격한 회사나 팀은 초상집 분위기이다. 따라서, 교과서 작업은 개발 과정에서도 수많은 나날을 달과 별을 벗삼아 야근과 특근으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당락의 결과가 우리에게 또 다른 업무의 스트레스로 다가선다.

☞ 교과서 작업을 준비하며……

어느덧 4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처음 2005년 10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수학 교과서 개발을 위해 팀이 구성되었을 때 팀원들은 교과서 개발 경험이 없는 사원이나 대리 1년차로 구성되었다. 이때, 팀원들 마음에는 교과서 작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과연 내가 이 힘든 작업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걱정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을 것이다. 우리 교과서 편집 책임자인 나로서도 경험이 없는 이들과 함께 기나긴 교과서 개발 여행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교과서 작업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과, 이번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 작업이 끝났을 때 경험이 전혀 없던 이들이 새로이 교과서 편집 전문가로 거듭난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5년을 주기로 하는 예년에 비해 그 적용 시기가 많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각 학년마다 교과서와 익힘책을 각각 개발하여야 했으며, 또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동시에 개발해야 하므로 업무량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다. 실질적으로 우리 팀의 경우 2009년 6월 현재까지 중학교 2학년과 고등 선택 과목 교과서까지 모두 개발하니까 총 8종 16책이 되었고, 교사용 학습 보조 자료까지 개발한 것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수학 교과서 개발의 큰 특징은 대부분의 다른 과목의 교과서는 이미 예전부터 4도 컬러로 개발하였지만 수학 교과서의 경우 처음으로 본문이 2도에서 4도 컬러로 바뀌므로 본문 디자인과 삽화, 사진 등에 예년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만 했다.

위의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하며 나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 작업을 하였다.

먼저 교과서 편집 경험이 없는 편집자들에게 교과서 편집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가다듬게 했다.

이를테면 본격적인 교과서 작업을 하기 이전에 “교과서는 무엇인가?”, “교과서 편집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교육과정과 집필상의 유의점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학습을 시켰다.

이런 학습 때에 내가 강조한 것은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각 과목의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 이바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교 교육의 바이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학습물, 모든 수준에 대한 모든 종류의 교수 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 등에 철저한 분석의 대상임을 인식시켰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은 일 년에 많이 가르쳐야 몇 백명 정도에게 교육 내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교과서 개발을 하는 편집자들은 많으면 수만 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디자이너, 삽화가, 조판 업체 등의 거래처도 다른 출판사에서 우수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수한 업체를 먼저 섭외하고 교과서 개발 준비를 해야 했다.

우리 팀은 우선 기존의 거래했던 거래처와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받아 디자인, 삽화, 조판 등 각 파트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를 경쟁시켜 최상의 거래처를 섭외하고 본격적인 교과서 작업을 하기 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였다.

☞ 교과서는 정성과 끈기 그리고 세심함

나는 교과서 작업을 제6차 교육과정부터 시작하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 교과서 시즌마다 참여하였다. 여러 차례 교과서 작업을 하다 보니 선배들의 교과서 편집에 대한 가르침과 경험으로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운이 좋게도 교과서 성적도 매우 좋았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교과서 작업은 명확한 교육과정 이해, 교과서 개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 출가시키는 것과 같이 정성과 끈기만이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 막바지 작업 때의 일이다. 그날도 몇 날 며칠을 밤을 지새우며, 조그만 회의실 탁자에서 혼자 마지막 필름 교정을 보고 있는

데 건너편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물론, 막바지가 되니 기력이 쇠하여 허깨비를 본 것이다. 이런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교과서 작업 자체가 그만큼 끈기가 있어야 한다.

역시 이번 교과서 작업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야근과 철야로 몇 달간의 정성과 끈기를 통해 자식과도 같은 책을 개발하였다.

하루는 어느 팀원한테 9~11월의 3개월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한 것을 빼고 매월마다 야근만 175시간을 했다는 낯두리 식의 메일이 왔다. 정말로 새벽 두세 시까지 작업을 해도 아쉬움을 남긴 채 퇴근했다가 잠깐 잠을 자고 출근하는 시간이 반복된 것이다. 보면 볼수록 다듬지 못한 부분이 나왔지만 시간이 정말 부족하여 단 일주일만 교과서 출원을 늦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과서 출원을 하기 전 삼사일을 남기고 타 출판사에서 인덱스 부분을 넣었느냐는 문의가 왔다. 물론 우리는 넣지 않았고, 인덱스가 교과서 검정 합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팀원들과 저자들은 넣지 말자고 하였으나 그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검정에 불합격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결국은 넣기로 하였다.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넣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막바지가 되면 별것이 다 걱정된다.

☞ 우리는 한 팀

교과서 개발은 전체 3~4여년을 소요하는 장기간의 작업이다. 이때 매년 초, 중반 기간까지는 가급적 교과서의 컨셉과 교과서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교육적 이념을 잡고 원고를 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우리 팀의 경우 저자들 가운데 광주, 대전, 청주 등

지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 주말에 모여 회의와 토론을 거쳐 원고를 다듬고 교과서 체제를 잡았다. 이때 회의나 소통의 원활을 위해 저자 구성을 가급적 중학교는 서울과 충청도 지역으로, 고등학교는 서울과 광주 지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런 팀 구성으로 인하여 주중에는 회사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고등학교 팀은 광주에서, 중학교 팀은 청주 또는 대전에서 1박 2일 회의를 해야 했다. 물론, 막바지 2~3개월은 서울 사무실에서 저자 회의를 진행했지만, 초·중반까지는 금요일 저녁에 짐을 싸고 토요일, 일요일 지방에 내려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반복하였다.

이런 회의를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팀원들과 저자들도 지치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모든 분들이 성실하게 작업을 하였고, 이런 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하였다.

또, 교과서 작업 중 간혹 일정대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원고 집필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 이때도 우리는 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과 학습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이렇게 회의를 통하여 교과서와 익힘책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따라 견본 원고를 집필하였다. 그리고 견본 원고를 검토하는 회의 과정에서 교과서와 익힘책 모형에 대해 수정을 하였고, 수정 모형에 따라 견본 원고를 재 집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오늘날의 교과서 원고를 구성하게 되었다.

☞ 익힘책, 새로이 넘어야 할 산

다른 출판사 수학 교과서 편집자들도 같은 고민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교육과정에서의 고민거리는 익힘책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교과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와 익힘책을 동시에 제출하였다.

교과서의 경우는 제 6~7차 교과서나 유럽, 미국 등의 외국 교과서와 같이 참고 자료가 다양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익힘책의 경우는 참고할 만한 모델이 별로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을 근거로 고민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개발 초기에 익힘책의 방향을 잡는 데 예상외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따라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편수관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이 전달하는 공문이나 각종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익힘책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으며 평소 저자들이 생각하는 교육 이념 등을 바탕으로 익힘책을 개발하였다. 특히, 익힘책 체제를 잡을 때는 수차례의 개고와 체제 변경을 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수도 없이 다듬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교과서와 익힘책이 개발되었다.

이 글을 줄이며

지금까지 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우리 팀 수학 교과서 개발 과정과 교과서 애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였다. 이제 평소 내가 생각했던 교과서관에 대하여 말하고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이번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고등 수학 교과서를 한창 개발 진행 중 회사에서 나한테 또 하나의 업무가 주어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정 초등 수학 교과서 개발을 맡으라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지금도 중·고등 교과서 개발로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데 처음 해보는 국정 초등 수학 교과서 개발도 진행하라고 하니 너무 벅찬 것 같았다. 그러나 초등 수학과 관련해 다년간 경험 많은 팀원들이 배정되었고,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초등 수

학 교과서 개발 업무도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초등부터 중·고등까지 전체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편집자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요즘, 새로 입사한 편집자나 기존 편집자들 가운데는 교과서 작업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교과서 팀으로 발령 받으면 야근과 철야, 합격에 대한 스트레스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신입 사원이나 후배 직원들에게, 편집자로서 교과서 작업은 반드시 한번 이상은 거쳐 가야 할 작업이라고 애기한다. 또, 5년 주기로 찾아오는 교과서 시즌에는 교과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 작업을 충실히 하다 보면 바뀌게 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참고서 개편이나 신간 작업을 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서 작업을 통해 각 과목에 대한 확실한 전문가적인 편집자가 될 수 있고, 평소에 책으로나 볼 수 있는 유명한 교수님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교육과정평가원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신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교과서 개발 참여로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합격에 대한 성취감, 자신의 편집 역량 개발을 생각하며 젊은 편집자들이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참여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개발은 집필진과 편집자 모두 자기와 자신의 가정에 대한 희생과 사명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매진하여 근 4년간 교과서와 익힘책 개발에 함께해 온 집필진과 편집진에게 그동안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지면을 통하여 전하고 싶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8)

조영철

-(주)새롬교육 CEO-



① (주)새롬교육은 고등 학습서 시장에서 교재의 질적 우수함으로 작지만 강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8년부터 중등 학습서 시장에 뛰어들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새롬교육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5월 첫발을 내디딘 ‘(주)새롬교육’은 올해로 창립 9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느덧 내년이면 딱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회사라고 할 수 있지요.

‘(주)새롬교육’은 2000년 창립 이래 ‘수능 해커’, ‘메가스터디(Megastudy)N제’, ‘새롬N제’, ‘수능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등의 초베스트셀러를 발간하며 수능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참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출판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새롬N제’의 경우 수능 문제 위주의 ‘N제류’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제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능 시장 석권을 목표로 한 우물만을 판 끈기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10주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이 (주)새롬교육으로서 변화와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가 필요한 때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새롬교육은 그동안의 고등 교재 출간 노

하우와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마치고 중등 시장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착수한 중학교 교과서 발행 사업과 ‘더오름 중학 수학’, ‘중학 영문법 끝내기’ 등의 중등 학습서 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9년 올해에는 중학교 국어1, 생활 국어1, 사회1, 수학2 교과서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교과서 검정 출원 100% 합격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② (주)새롬교육은 수능 시장을 선도하는 참신한 제품으로 높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능 시장을 석권한 제품 소개와 더불어 초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한다면 무엇일까요?

(주)새롬교육’은 회사명과 심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움’, ‘열정’, ‘젊음’, ‘성장’을 추구

하는 기업입니다. 즉,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오늘날의 (주)새롬교육을 있게 한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연간 100만 권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대입 수험생의 필독서인 (주)새롬교육 대표 브랜드 ‘새롬N제’의 경우, 2001년 (주)메가스터디라는 신생 이러닝 업체를 오늘날의 이러닝 1위 업체로 성장하게 한 발판이 된 ‘메가스터디N제’가 그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새롬교육에서 메가스터디와의 제휴로 개발한 ‘메가스터디N제’는 8절 위주의 실전 문제집이 대세이던 당시 실전서 시장에 선생님들과 수험생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반영한 군더더기 없는 체제와 구성, 양질의 문제, 마케팅 효과까지 고려한 좌철 판형 등을 내세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메가스터디N제’를 한 권씩은 팔에 끼고 다닐 만큼 초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능서 시장에 ‘N제류’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확한 니즈(needs)를 파악해 이를 교재에 반영하고자 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주)새롬교육의 정신을 잘 보여 준 예라 할 수 있겠지요.

이외에도 단행본으로는 최고의 판매율을 자랑한 완벽한 자학자습용 교재인 ‘고전 문학 특강’, 언어 영역의 최강자라 할 수 있는 ‘수능 해커’, 연간 10만 권 이상의 판매로 수능 영단어집으로는 초베스트셀러의 기록을 갖고 있는 ‘초스피드 암기 비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새롬교육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열독’, ‘수문짱’, ‘수능 기출 백서’ 등의 제품군을 꾸준히 출시하여 수능 시장을 더 넓혀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사업 및 중등 학습서 시장으로까지 그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③ 수능서를 주로 출간해 온 (주)새롬교육에서 교과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과서 개발 현황은?

처음 교육 출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 육성에 공헌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그릇을 키우겠다는 이러한 사명감은 그릇을 형상화한 (주)새롬교육 심벌이나 “교육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인재 육성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은 교육의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는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서 출판인이라면 누구나 좋은 교과서에 대한 꿈과 욕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러한 공교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과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새롬교육은 2008년 합격 판정을 받은 중학교 수학1 교과서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중학교 국어1, 사회1 등 검정 출원했던 모든 중학교 교과서가 100% 합격되면서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도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그 범위를 넓혀 고등학교 국어, 중학교 역사 등의 과목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이 제7차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현재의 시점은 출판사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④ 교과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이며,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무엇보다도 교과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좋



교육 출판 기업으로서
 학생들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우수한 제품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것 또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 .



아야 하고, 학생들은 배우기에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교과서일지라도 가르치기 어렵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교과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바로 현장 적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일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수차례의 설문 조사 및 면담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며 최대한 개발 중인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좋은 교과서라는 평가로 되돌아왔습니다.

작은 현장의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새롭교육 교과서의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주)새롭교육의 교과서를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러나 교과서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⑤ (주)새롭교육 교과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은?

2009년 적격 판정을 받은 (주)새롭교육 중학교 국어1, 생활 국어1, 사회1, 수학2 교과서는 모두 현장 적용성이 매우 뛰어난 교과서들입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풍부한 현장 경험과 탄탄한 이론을 갖춘 최고의 저자들이 집필한 교과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새롭교육의 교과서는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기 좋게,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즉, 재미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교과서인 것입니다.

현재 (주)새롭교육의 목표는 진행 중인 중 고등학교 국민 공통 기본 과목 중심의 교과서 개발을 기반으로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의 밑거름이자 믿음직한 동

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새롬교육은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⑥ (주)새롬교육은 홈페이지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어떤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2001년 12월에 오픈한 (주)새롬교육 홈페이지(www.isaerom.net)는 새롬교육 제품에 대한 안내 및 구입은 물론, 풍부한 교육 정보 및 선생님용 수업 지원 자료까지 자유롭게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새롬교육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 본문 한글 파일, ppt 수업 자료 등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서비스만이 아닌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도 마련해 놓고 있죠. 고객 서포터즈 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S-VIP 및 T-VIP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여 (주)새롬교육 제품에 대한 기획, 평가, 홍보 활동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객과의 소통이야말로 제품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⑦ 마지막으로 (주)새롬교육이 추구하는 기업 운영 철학과 인재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주)새롬교육이 최고의 교육 출판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혁신’, ‘창의’, ‘도전’,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 둘째, 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기업, 셋째, 고객과 직원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는 기업, 넷째, 고객과 직원에게 감동을 주는 기업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새로움, 즐거움, 믿음, 감

동’이라는 네 개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지요.

이는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도전 정신과 열정을 지닌 인재!

무엇보다 (주)새롬교육은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과 개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명한 강사를 모시고 다양한 사내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직원들의 역량 발휘 및 자아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실시된 ‘조직 리더십’이라는 특강의 경우 직원들에게 주인의식과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이 채 안 된 짧은 역사를 지닌 (주)새롬교육이 주목받는 출판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이와 같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출판 기업으로서 학생들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우수한 제품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것 또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새롬교육은 내실 있는 작지만 강한 회사로 오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 출판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새롬교육도 여러분의 미래가 (주)새롬교육의 미래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연**

■ 대담 / 김종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교육과학기술부 홍보 자료

좋은 교과서 만들기

- 선생님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교과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시험 문항 출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검정 도서는 민간에 개발한 교과서를 정부가 검정하여 시장 진입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로써,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 공급됩니다.



좋은 교과서 만들기, 선생님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좋은 교과서 만들기에 선생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까요?

하나, 공정하게 교과서를 선정합니다.

교과서 주문 부수가 교과서의 질 이외의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는 출판사가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신에 교과서 선정을 위한 로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때, 그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해 질 때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교과서 선정시 심사본 및 심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심사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운영부 심사본 열람실
- 2009년 8월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상세한 절차는 <http://tba.kice.re.kr>에 안내 예정

◆ 심사 보고서

- cutis.mest.go.kr > 교과서 > 자료실 > 해당 학교급 > 해당 교과 > 해당 도서명 > 수정 보완 대비표
- www.ktbook.com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 tgb.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도서 홈페이지)

둘, 검정 심사에 직접 참여합니다.

검정 심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도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현장 교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 도 교육청 및 학회 등을 통해 검정 위원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2010년 검정 심사 일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숙 일정을 가급적 방학 중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 일정은 심사 대상 도서 수에 비례합니다. 아래 표는 일정이 가장 긴 심의회를 기준으로 예시한 것입니다.

구분		검정 일정
기초 조사(연구 위원)	연수(합숙)	2009. 11월 중(4일)
	조사(재택)	2009. 12월 중(30일)
	종합(합숙)	2010. 1월 중(최대 7일)
본심사(검정 위원)	연수 및 심사 I (합숙)	2010. 1월 ~ 2월(최대 5일)
	심사 II (합숙)	2010. 2월 중(최대 9일)

※ 검정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참여를 원하는 선생님께서는 공모 기간(8월 예정)에 검정 인력 풀 공모 사이트(<http://tbp.kice.re.kr>)에 접속하여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숙지한 후 공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검정 위원 명단을 2010년 검정 심사부터는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검정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것입니다.

국정 도서에는 심의 위원 명단을 게재하면서도 검정 도서에는 검정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2010년 검정 심사에 참여하신 선생님의 명단을 교과서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셋, 교과서의 오류를 신고합니다.

사용 중 교과서의 내용 오류를 발견하면 cutis.mest.go.kr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해당 발행사에서 확인 후 바로 답변 드립니다.

· cutis.mest.go.kr > 교과서 의견 제시하기 > 해당 학교급 > 해당 교과 > 해당 도서명 > 해당 출판사명 > “글쓰기”

교과서 사용 중에 수정되는 사항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utis.mest.go.kr > 교과서 의견 제시하기 > 해당 학교급 > 해당 교과 > 해당 도서명 > 해당 출판사명 > “수정 보완 사항 확인”

연구재단 소식

※ 2009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수증

○...우리 연구 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 중인 2009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를 각 발행사로부터 기증 받아 '교과서 정보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교학사(41권), 금성출판사(37권), 두산동아(322권), 미래엔컬처그룹(73권), 지학사(75권), 천재교육(111권), (사)한국검정교과서(985권)입니다. 기증에 협조해 주신 발행사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우리 연구 재단에서는 교과용 도서 발행사 편집 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과서 출판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하고자 '교과서 출판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는 '교과서 출판 교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 편집 입문자 과정

· 운영 단위: 3일 15시간

· 기간: 2009. 5. 20. ~ 5. 22.(제1기),

6. 17. ~ 6. 19.(제3기)

· 참여 인원: 제1기 22명, 제3기 21명

– 편집 중급자 과정

· 운영 단위: 3일 21시간

· 기간: 2009. 6. 3. ~ 6. 5.(제2기)

· 참여 인원: 15명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맡아 주신 여러 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원자력 시설 현장 연수 실시

○...우리 연구 재단은 (재)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교과용 도서 발행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원자력 시설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서 편찬 자료 수집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간: 2009. 4. 29. ~ 4. 30.(1박 2일간)

– 장소: 울진 원자력 본부

– 참여 인원: 29명

행사를 후원해 주신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특수 학교	미래엔컬처그룹	(02)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6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지학사	(02)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예 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학사	(02)712-2188
	중학교	○ 국어 1, 2, 3학년(생활 국어 포함), 국사, 특별 활동 지도 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6
		○ 생활 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학사	(02)330-5302
	고등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해양 과학, 확률과 통계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6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농업계	지학사	(02)330-5302
		○ 외국어계(아랍 어1, 2)	천재교육	(02)3282-2851
		○ 과학계(생활과 과학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체육계	교학사	(02)712-2188
검정 교과서		위 교과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	(02)3663-5409~12

| 서울 지역 직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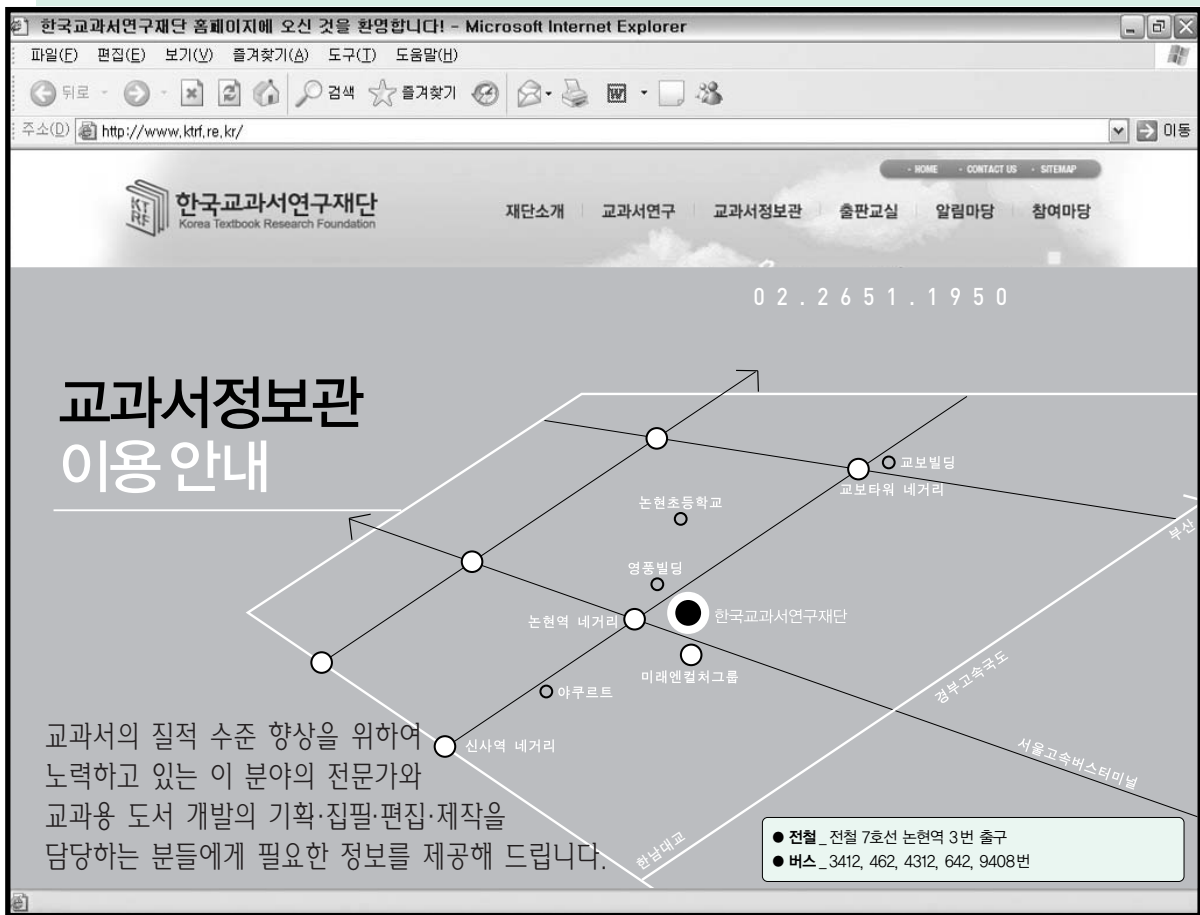
- (주)미래엔컬처그룹 직매장-모든 국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컬처그룹 빌딩 1층(☎ 02-3475-4097)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두산 동아(주) 직매장-모든 국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02-3670-5106)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 여 분 야 _ 〈현장 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 | |
|---------|---------------------------------|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포인트 3.5매) |
| · 원고 제출 | 수시 접수 |
| ·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 보내실 곳 | E-mail 접수 (editor@ktrf.re.kr) |
| · 기타 문의 | 전화 (02) 2651-1953 연구지 담당자 앞 |



| 운영 개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9,076	6,587	35,663
일반 자료	2,839	-	2,839
계	31,915	6,587	38,502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휴관
공휴일	휴관